

인권 자료실	
등록	자료번호
	03 91

6월항쟁 12주년기념 시국토론회

김대중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 -

일시 : 1999.6.16 오후2시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주최 :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6월항쟁 12주년기념 시국토론회

김대중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 -

일시 : 1999.6.16 오후2시

장소 : 송실대학교 사회봉사관

주최 :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988.0.16

대통령 취임 10주년 기념 토론회

1988.0.16

1988.0.16

1988.0.16

1988.0.16

1988.0.16

1988.0.16

1988.0.16

토 론 회 순 서

〈사회 : 광노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민교협 공동의장)〉

14:00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인사

14:10 주제발제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치·사회정책 평가(정영태 인하대 교수)

14:40 지정토론

-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 평가(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대중정권의 농민정책 평가(최진국 전농 정책위원장)

- 김대중정권의 빈민정책 평가(양해동 전빈민 집행위원장)

- 김대중정권의 여성정책 평가(남인순 여연 사무처장)

- 김대중정권의 경제, 사회복지정책 평가(김성구 한신대 교수)

15:50 휴식

16: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8:00 폐회

김대중정권의 정치·경제·사회정책 평가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영태 교수

1. 김대중정권의 역사적 의미

87년 6월항쟁에 의한 민주주의로의 도정(道程)이 시작된지 12년이 지났다. 그리고 6월항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정권이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돌이켜 보건데, 김대중정권의 출범은 여러 가지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우선, 야당이 반공수구의 집권당과의 합당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그래서 불완전한 정권교체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던) 김영삼정권과는 달리 김대중정권은 야당의 정치연합에 의해 집권하게 되었다는 점이다.¹⁾ 이런 이유 때문에, 김대중정권의 출범을 해방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다음, 30년이상 차별대우를 받아온 호남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점이다. 그 다음, 제도권에 진출해 있는 정당·정치인 가운데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에 가장 우호적인 정당·정치인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외세(IMF와 미국 등)가 공개적으로 개입하여 후보들로부터 IMF협약 준수를 약속하는 서면각서를 강요한 최초의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앞의 세 가지 특징과, 김대통령이 그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대중'과 '호남' 얘기만 나와도 흥분하던 사람들도 새정권이 잘 해주기를 기원했다.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치 및 정부 개혁, 재벌개혁, 교육개혁, 모든 차별 폐지,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수립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취임사는 이러한 기대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²⁾

1)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자민련을 야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김영삼정권하에서는 집권당인 민자당의 한 분파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연합은 이전의 민정·민주·공화 3당합당과는 적어도 두 가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합당이 아니라 조직의 독자성이 유지되는 정치연합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김영삼의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회의는 정치연합의 수적,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김대중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리고 있는 미래의 우리 사회는 대략 이렇다.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주인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그래서 국정투명화와 부정부패의 척결)를 실현된 사회, 지역차별·성차별 등 모든 종류의 차별과 특혜가 제거된 사회, '작지만 강력한 정부'가 통치하는 사회, 재벌은 개혁되지만 기업의 자율성은 철저히 보장되는 시장경제체제,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사회, '바르게

그러나, 김대중정권이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실업자는 넘쳐나고 노숙자는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중산층이 몰락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돈이 남아도는 부자들은 1억원에 가까운 밍크코트를 걸치고 다니는가 하면, 국민들이 하라는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미뤄놓은채 국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혼선과 무능만 보이는 여야정치인들은 권력의 맛을 놓치지 않으려고 신중 '관권개입'과 (한 지역구선거에 20~30억원을 퍼붓는) '돈선거'를 자행하였다. 정치인과 고위관료를 남편으로 둔 부인들은 '옷너물사건'을 저질르고 있다. 부정부패와 탈법행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할 검찰이 '상부'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 반성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런 여론을 나무라는 김대중대통령의 태도는 그동안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조차 등을 돌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개혁이 지연되고 국정난맥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야당·재벌·보수언론·관료집단 등 개혁대상의 저항이나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몽니' 탓이라고 믿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것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주변사람(청와대 비서실)과 국민회의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옷너물사건'과 '검찰 파업유도사건'이 터지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방식을 확인한 지금,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믿음만큼은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조차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김정권이 지난 1년 6개월동안 각 분야에서 취한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방안과 과제를 정리할 것이다.

2. 김대중정권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

(1) 경제분야

김대중정권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차입협상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권과 민족자존심의 상실이라는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사회,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회, 능력위주의 사회, 민족문화가 세계화된 사회,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자주적 집단안보체제와 강화된 한미안보체제하에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 등이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 박윤식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의 관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IMF차관을 최악의 조건으로 들여왔고, 세계은행 차관도 역사상 처음으로 차관이자 이외에 전(前) 수수료와 후(後)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지난 12월말 3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적어도 1억달러(한화 1천5백억원) 이상의 '바가지'를 씌웠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구의 성격상 지원자금의 금리는 기준금리인 리보에다 0.2~0.3% 정도만을 가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세계은행은 「IMF와 금리를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압력을 핑계로 한국에 대해 리보에다 1%를 가산했다. 그것도 모자라 전례없는 「서비스 수수료」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수수료만 원금의 3.5%를 더 붙였다. 금융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30억달러를 빌려 주면서 1억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한 것은 극히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에서 받은 높은 이자돈으로 기구내에 특별재단까지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이라면 한국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봉(鳳)」이 된 셈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우리가 '역사상 유례없는 악조건과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다시 치욕적인 '국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국내외에 소문내고 다녔다.

국제사회에서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모습을 봐서인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한국을 가볍게 여기고 무리한 요구도 예사로 하기 시작했다.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가속화했고, 김대중정권이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일자리창출 등과 같은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사사건건 내정간섭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행했다. 물론 이러한 압력에 대해서 김대중정권은 저항없이 때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첫 번째 사례: 립튼 미재무차관이 조선일보사와 가진 단독회견에서 "김대통령은 고통의 분담을 제시하면서 경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정되고 경쟁력있는 경제를 만들려하고 있다. 한국은 좋은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화는 여전히 약하고 평가절하되어 있으며, 은행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가장 큰 위험은 한국이 스스로 현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다. 패닉이 진정되었으므로 개혁과정을 늦추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불행이 될 것이다. 김대통령이 설정한 개혁일정이 반드시 완전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것은 한국과 아시아,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사태 초기인 12월초 반미감정이 나타났을 때 한국인들은 문제의 심각성과 미국이 개입한 의도의 본

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자 미국이 친구로서 왔다는 점이 이해되면서 반미감정이 수그러들었다"고 떠들어 댔다.

두 번째 사례: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1998년 3월 18일에 내용은 「98년도 한-미 무역-투자 이슈」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 의약품시장, 회계제도, 금융시장, 자동차시장, 노동-고용정책 등이 외국기업이나 상품에 대해서 차별적이거나 폐쇄적이라고 하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경제위기에서 도와주려는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동-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급 등 혼란스러운 급여체계를 아주 단순하게 해야 한다. 회사는 파업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새 직원으로 대치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 집단행동은 회사 밖에서만 벌이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파업기간 임금보상을 위해 파업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세 번째 사례: IMF와 미국 정부가 끈질기게 외환관리법 폐지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외화유치라는 미명하에 달러 유출-입을 규제하던 '빚장'을 모두 풀었다. IMF와 미국은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을 선진국 자금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막고 있는 근원적인 '장애물'로 보고, 전면 개편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외세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정권은 우선 무역과 투자부분부터 자유화하고 개인의 해외송금 등 나머지 부문은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투자도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유치 전략으로 전환하고, 지원체제를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강화, 인-허가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이 투자인가를 신청했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했다. 핫머니가 금융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을 막기 위해 외화 가변예치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며,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외환거래세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외환거래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안정장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 장치들이 외환자유화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가급적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네 번째 사례: 98년 9월에 예정되었던 세계은행 차관 20억달러 도입에 차질이 빚어졌다. 98년 9월 11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와 세계은행이 애초 9월 안에 20억달러 지원 협상을 마치고 세계은행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 중 10억달러를 들여오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협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세계은행 이사회가 10월 13일로 연기되었다.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세계은행이 예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협상테이블에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사이에서는 세계은행이 26개 직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노동자파견제에 제한을 없애고,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고용조정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한다는 말이 흘러나왔

다. 또 공정거래와 관련해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한국에 적용하고, 지주회사 허용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구조조정에서 세계은행은 은행에 대한 증자지원을 합병의 경우로 한정하지 말고 자체 정상화 노력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 이미 합의한 내용과 상치돼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번째 사례: 98년 3월 미국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중유(重油)비용을 경제위기에 빠진 한국에 전가하려고 했다.

외환위기와 관련된 김대중정권의 '업적'을 정리하자면, 치욕적인 '국제사기'도 당하고 내정간섭도 받았지만, 외채규모가 줄어들었거나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전혀 아니다. 단기외채를 중장기외채로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미래를 담보로 당장의 급한 불만 꺾을 뿐이다. 즉, 김대중정권은 IMF와 세계은행 등과 차관협상을 하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지불했으며, 시장개방과 구조조정 등 국내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은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치적으로 국내외에 선전하고 다님으로써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봉'이 되게 만들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이 외환위기나 외세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김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정부」는 수출 못지 않게 외국자본의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외자유치야말로 외채를 갚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고 선언하였으며, 98년 6월 방미중에는 미국인의 투자를 '구걸'하기조차 했다. "현재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투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한국 국민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 중 87%는 외국인투자가 한국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외국 투자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대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김대통령, 미국 상하 양원 연설<요지>"), 《국정신문》, 1998.6.15). 비슷한 요지의 연설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행했다.

이처럼, 김대중정권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애쓴 결과, 우리 경제는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외국인 '큰 손' 놀림에 따라 '미친 x 널 뒤흔'하고 있다. 세상물정 모르는 한국인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이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무려 7.1%를 차지하였다. 작년 한해동안 이루어진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총 88억5천2백만달

리에 이르며, 경영권을 넘겨받는 기업인수·합병(M&A)형 직접투자가 53%를 차지하였다. 올들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계속 되어, 지난 1~3월 중 모두 389건의 20억4백만달러가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공장신설과 증자참여 등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15억1천2백만달러로 75%를 차지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의하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다국적기업은 제조업체 399개사, 서비스업체 70개사로 모두 469개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중 82%인 325개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고도기술수반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체 중 32개가 은행금융업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은 11억9천만주로 97년말에 비해 56%나 증가했으며,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주식보유비율은 9.1%에서 10.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수가 50%를 넘어선 상장사는 쌍용제지, 쌍용정유, 하이트맥주,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전관, 아남반도체, 주택은행 등 10개사에 이르고, 외국인지분이 내국인 최대주주보다 많은 상장사는 하나은행, 한미은행 등 42개사에 이른다. '제철보국'의 상징이었던 세계1위의 철강사인 포철도 40.77%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로 부상하였다. 외국인투자가나 기업이 제철, 반도체, 금융산업 등 한국경제의 핵심을 차지해가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면 외환위기도 극복하고 재벌개혁도 강제할 수 있으며 일자리와 기술이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김정권은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과학기술의 메카였던 '대덕연구단지'는 IMF직격탄을 맞은 민간기업연구소(한진종합연구원, 한효과학기술원, 한솔기술원 등)는 문을 닫았고, 살아남은 기업연구소들은 연구개발인력과 연구지를 크게 축소하였으며,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정부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원의 10%이상을 정리하였다. 그나마 남아 있는 연구원들은 연구비가 크게 삭감되거나 중단되어 계속 되어야 할 연구마저 못하고 있다. 연구공동화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들어서도 계속 되었다. 재벌간 빅딜의 발표로 국내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해외 경쟁업체로 대거 스카우트되어 가버렸다. 삼성-LG-현대-아남 등 반도체 4사 고급연구인력은 약 4천명정도였는데, 이 중 400여명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빅딜이후의 직장이거나 연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재벌개혁은 제대로 추진했는가. 올해 지정된 30대 기업집단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재벌구조조정이 상당부분 '눈가림'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말 부채비율은 380%로 전년말 519%보다 139%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러나, 부채총액은 357조원에서 367조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빚이 늘어났는데도 부채비율이 떨어진 것은 자산평가나 유상증자 등으로 자기자

본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5대 재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대이하 그룹의 부채총액은 97년말 136조원에서 지난해 말 132조원으로 조금이나마 줄었으나 5대재벌은 221조원에서 234조원으로 오히려 13조원 늘어났다. 구조조정의 결과 30대 그룹의 계열사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줄어든 118개 회사 가운데 5대재벌 계열은 23개사 뿐이고 6대 이하 그룹이 95개사나 되었다. 자산총액도 5대재벌은 대폭 증가한 반면 6대이하 그룹은 오히려 감소하고, 수익구조도 6대이하 그룹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는 등 경제력의 5대재벌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한겨레신문, 1999. 4.5). 간단히 말해서,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재벌개혁은커녕, IMF와 약속한 개혁조차도 눈가림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외국인투자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제3세계 등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선진적인 노사관계제도와 기술을 이전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적합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권유린은 물론 내부거래에 의한 가격이전(price transferring) 등의 방식에 의한 잉여송금을 해 왔다. 다시 말하면,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이 땅에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한에서만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과 간섭을 강화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반드시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열사간 부당지원, 노사관계 등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경영권방어에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외국인투자자들은 조세감면이나 파업방지 등과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외국상공인연합조직을 결성하고, 한국정부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얼마전 서울지하철 파업때 국내에 진출한 외국상사나 기업들, 또 투자를 고려중인 해외업체들은 "파업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어느 쪽도 승자가 될 수 없다"며 "경제회복의 시발점에 서있는 한국의 파업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는가 하면, 주한미 상공회의소장인 제프리 존스는 "미국 측의 투자보류로 한국이 잃는 금전적 손해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우리 정부에 대해서 파업을 중단시키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어느 한 언론사에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기업들은 주한외국인단체(예, 주한미상공회의소 등)를 'DJ정권 이후 영향력이 가장 강화된 집단'으로 지목한 점은 '자화자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이엠에프(IMF) 이후 높아진 외국기업의 위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이엠에프 이후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점차로 커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자본가들의 조직인 전경련에서는 주한외국기업들의 회원가입을 받고 있다. 지난 4월초까지 한국 3M, 볼보(Volvo)건설기계코리아, 한국카본블랙(Carbon Black), 한국코카콜라(Coca Cola) 등 모두 4개의 외국기업이 가입하였으며, 모토로라(Motorola)도 가입의사를 밝혀 놓은 상태이다. 전경련에서는 “연간 매출 500억원 이상인 외국기업들은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어서 외국기업 회원사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주한미상공회의소와 주한EU상공회의소 등 외국기업단체들의 가입도 추진중”이라고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자본가계급의 국제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고려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가들의 국제연대는 외국의 다국적기업을 상위파트너로 하고 국내기업을 하위파트너로 한 형태로 가고 있다.

이처럼, IMF를 앞세운 초국적자본의 공세에 의해서 한국경제는 외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으며, 초국적자본과 그 대리인인 IMF와 선진자본주의국가 그리고 하위동맹자인 김대중정권의 공세로 벼랑 끝에 서있는 재벌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쓰고 있다. 그러나, 재벌을 비롯한 국내자본가들은 노동문제에 관한 한 다국적자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는 물론 국내시장에서조차 하위동맹자로서 만족할 것이고, 초국적자본을 비롯한 외세도 한국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면 재벌을 완전히 굴복시켜 버리는 것은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정권은 초국적자본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들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국내집단보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대변해 왔다. 그래서인지, 국내집단보다도 IMF나 미국 등 외세가 김대중정권에 대해서 만족감을 강하게 표현했다. 김대통령은 미국의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지에 의해 (유종근 전북지사, 김정태 동원증권사장, 참여연대 장하성교수와 함께) ‘아시아의 스타’ 50인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미국 필라델피아지역의 상공인-시민 지도자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그레이트 필라델피아 퍼스트’(Greater Philadelphia First)라는 민간조직이 미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89년부터 매년 수상해온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상금 10만불)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레이트 필라델피아 퍼스트’가 김대통령에게 수상을 결정한 이유는 “투옥과 암살 기도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아시아의 개방경제를 위해 생애를 헌신한 공” 때문이었다.

(2) 사회분야

사회분야와 관련하여 김대중정권이 추진한 정책에는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인권정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김대중정권이 신경을 썼던 정책은 역시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었다.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김대중정권이 실업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이 ‘말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직장에서 정리해고시킨 뒤 새일자리가 생길때까지 기본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재벌개혁,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경제회생은 불가능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리해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정권은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다. 여기서 노동자대표들로부터 국내의 기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조치(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자제 등)를 ‘자유롭게’ 취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양보’를 강제해 냈다. 노동의 ‘양보’에 대한 보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복수노조허용, 교직원노조 인정 등 일반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물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밟을 것과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업주보다 김대중정권이 먼저 이 약속을 어겼으며, 따라서 기업주의 약속위반을 제대로 처벌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사정위에서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다른 것(예, 실직자의 노조가입허용, 교직원노조 합법화 등)들도 1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는 갑작스러운 실업자 양산이었다. 97년 아이엠에프사태 이후 올 99년 3월까지 15개월동안 매달 7만7천여명의 새로운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와, 97년말 56만여명, 2.6%에 지나지 않던 실업자와 실업률이 98년 7월에는 1백65만여명, 7.6%로 올랐고, 그 이후 10월까지는 조금씩 낮아졌다가, 올 2월에 다시 1백78만여명, 8.7%로 상승하였다(<표1> 참조).³⁾

3) 실제 실업률은 통계청발표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무역보다도 통계청자료는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실업자에서 제외하는 반면, 일시휴직자, 일용직,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의사가 있는 사람이 97년말의 2천1백34만명에서 98년말 2천1백18만여명으로 15만4천여명이 줄었는데, 이들이 바로 실망실업자이다.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는 97년말 12만6천명에서 98년말 19만9천명으로 무려 7만3천명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 임금노동자 중 일용직은 14.1%에서 16.1%로 늘어났다. 그리고, 사실상 실업자인 주당 17시간미만 근로자는 동기간 33만3천명에서 62만3천명으로 29만명이 늘어났다. 따라서, 실제

<표1> 연/월별 실업률과 실업자수의 추이(1980~1999.3)

년/월	80년	85년	90년	95년	96년	97년	98.1	2	3	4	5	6	7	8	9	10	11	12	99.1	2	3
실업률	5.2	4.0	2.4	2.0	2.0	2.6	4.5	5.9	6.5	6.7	6.9	7.0	7.6	7.4	7.3	7.1	7.3	7.9	8.5	8.7	8.1
실업자	748	622	454	419	425	556	934	1235	1378	1434	1492	1529	1651	1578	1572	1536	1557	1665	1762	1785	1704
증감	-	-	▽9	▽70	6	131	-	301	143	56	58	37	122	▽73	▽6	▽36	21	108	97	23	▽81

* 주: 증감은 1980~1987년의 경우 전년대비, 1988년 1월~1999년 3월까지의 전월대비

* 자료: 통계청, 매월 통계조사

실업이 노동자와 기업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장기화되는 고실업사태는 기업인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고나 임금삭감 또는 근로조건 저하는 물론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느끼게 만든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98년 기업주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건수가 11만 2천여건으로, 97년의 6만1천951건에 비해 거의 두배로 증가하였다(노동부 1999). 이 가운데 각급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은 4천186건으로 97년에 비해 96%가 증가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1999).

이러한 기업인의 행태는 국적이 따로 없다. 국제자유노련(ICFTU)이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보고에 의하면, 제3세계에 진출한(선진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의 노동법이나 국제노동협약에 위배되는 아동노동이나 단결권제약 등을 자행하고 있다(ICFTU 1997).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리고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이 미비된 탓으로 각종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으며, 심지어는 가족동반자살을 택하는 이들도 있었다.⁴⁾ 실업기금을 몇 조원씩 급조해 냈으

실업률과 실업자수는 정부발표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동아일보 1999.1.22). 주당 36시간 이하의 취업자도 동기간 1백78만7천명에서 2백43만1천명으로 64만4천명이 늘었다. 따라서, 실업 또는 반실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3백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실업자와 실업률을 400만명, 17%로 추산하고 있다(민주노총 1998.6).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고실업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금융위기의 회복과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률이 올 1/4분기말에 8.6%로 최고치에 달한 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기는 하겠지만, 외환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도 기업의 인력절감노력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동아일보 1999.3.9).

4) 최근의 실업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업가구 중 월소득 60만원 미만의 빈곤가구가 60%에 달하며, 정부가 제시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가구원 1인당 월소득 22만원, 재산 2,800만원 미만) 이하 가구가 실업가구의 38%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실업가구의 10% 정도는 병원비나 약국비 등 의료비용이 모자라 질병치료를 중단하

거나 아예 시작하지 못한 '의료빈곤층'이며, 14%정도는 월소득 60만원 이하 가구 중 월세를 내는 것이 어려운 '주거빈곤층'이라고 한다(윤진호 1998, 39-40). 98년 1월에 개설한 여선전용전화에는 남편이 아이엠에프 스트레스를 폭력으로 풀려고 한 다며 하소연하는 사례가 하루 평균 15~20통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시 가정상담소는 이런 전화가 울들어 2천875건으로 지난해보다 11.9%가 늘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98.4.2).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합의이혼건수는 6천805건으로 97년의 5천97건에 비해 35.5%가 늘어났다(동아일보 1998.11.15). 실직이나 가정경제파탄으로 점심식사 등 1끼 이상의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13만명이 넘는다고(동아일보 1998.11.8).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기아, 유아 등 요보호대상 아동이 97년 상반기 5천725명에서 98년 상반기에는 6천353명으로 11%가 늘었다(동아일보 1998.11.15).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자신이 없거나 실업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소극적이고 마음이 여린 이들은 훌쩍 집을 나가 길 거리를 방황하거나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이엠에프사태 직후인 98년 3월 880여명에 지나지 않던 노숙자가 6개월후인 8월에는 무려 2500여명으로 3배이상 늘어났으며(한겨레신문 1998.3.11, 9.23), 98년 9월말 현재 서울에만 노숙자가 2천550명이고 연말에는 3천300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동아일보 1998.11.8). 검찰 조사에 따르면, 98년도 1/4분기 자살자수는 2천228명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35.9%가 증가하였으며, 늘어난 자살자의 대부분이 'IMF형 자살'이라고 한다(동아일보 1998.5.23). 자살을 시도한 실업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겹다. <사랑의 전화> 상담원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실직자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첫 번째 사례: 대학을 졸업하고 17-8년동안 은행에 다녔다는 40대 중반의 가장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 그런데 모든게 엉망이다. 잠자기가 무섭다. 환한 빛이 싫다. 죽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고 울먹이면서 근근히 다음 말을 이었다. 자신의 월급은 물론 자신의 집과 부친의 집까지 담보로 얻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으나, 구제금융으로 인한 주가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직장도 집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는 세상을 잊으려 술에 취해 이틀동안 깨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부인이 "차라리 깨어나지 말지"라고 쏘아붙였다. 참담한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목숨을 끊으려 산이나 둔치에 여러 차례 찾았다. "자살은 정신이상자나 하는 짓인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그런 신세가 되다니... 어디에도 존재할 곳이 없다"고 탄식하며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사례: 서울 근교에서 자동차 농기계 부품업체를 운영했다는 40대 남자는 목숨을 끊기 위해 북한산에 와 있다면서 사연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운영한 중소기업은 잘 나갈 때는 연 50억원까지 번 탄탄한 중소기업이었으나, 구제금융의 한파로 부도가 났고,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아내와 두 아이를 처가로 보내고 난 뒤 친구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북한산으로 온 것이다. 전화를 끊기 전에 한 마지막 말은 "준비해온(취약인듯한) 약을 들고 여러번 울었다. 약봉지만 보면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울먹이며 한참 있다가) 전화카드가 얼마 안 남았다. 유언을 할머니 가족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였다. 세 번째 사례: 97년 12월말,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실직한 뒤 지금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남편을 둔 어느 가정주부는 생활고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닥을 알 수 없는 남편의 좌절감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얼마 전부터 틈만 나면 "난 죽는 것밖에 없어"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중2년 딸과 초등5년 아들에게 "아빠하고 죽을 용기가 있니"라고 묻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너무 겁이 나요. 차라리 내가 남편보다 먼저 죽고 싶어요." 통화 내내 그녀는 울음 반 이야기 반이었다(한겨레신문, 1998.4.8).

나, 실업수당이나 공공근로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업자는 20%미만이며, 많은 돈이 행정비용이나 심지어는 프로그램운영을 위탁받은 사설기관들이 중간에서 가로채 가는 일도 벌어졌다.

실업대책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연금의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과 의료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연금대상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실시한데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점이다. 김대중정권의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가장 손해를 보게된 층은 소득을 속일 수도 없는 임금·봉급생활자 또는 중산층이었다. 의료보험료인상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정책을 보면, 대학개혁의 경우 사학재단(이사장)의 자율성을 이전보다 강화하였으며, '신지식인'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학교가 '일류'라는 모토하에 학부제, 교수업적평가제, 수업평가제 등을 경쟁적으로 도입케 함으로써 학교간 또는 교직원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입시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류대학병'은 손대지 않은 채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교과과정을 개편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비리와 '치맛바람'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패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은 재단이 비용축소를 위한 개혁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개혁의 대상과 주체가 뒤바뀌게 되는 형국이 되었고, 그에 따른 교원들의 불만은 대단히 높다.

환경정책의 경우,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완화, 그린벨트의 대폭해제, 동감댐건설강행, 환경기준치 완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 동감댐건설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김대통령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동감주변의 수려한 경치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천만 수도권 주민의 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동감댐건설을 강행하려고 했다.

인권정책의 경우도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그것은 검경철의 '협약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에 따른 인권유린, 준법서약서로 형식만 바뀐 '전행제도', 아직도 싸늘한 감옥에서 늙어가고 있는 수많은 양심수, 인권위의 위상과 권한 등 때문이다.

(3) 정치·행정분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이들은 결집시키고 있는 정당)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정치권이 노사관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정당한 구속력을 갖는 결정들을 내리는 주체요 영역이며, 따라서 경제영역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만큼 개혁다운 개혁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국회제도개혁: 먼저, 국회개혁을 보자. 김대통령과 국민회의는 야당시절 때부터 국회의 기능을 전문화, 민주화, 합리화해야 하며, 대통령과 집권당의 횡포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IMF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정치비용의 감축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자민련도 대체로 동의해 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전횡이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 완화(재적 1/3이상의 의결에서 1/5 이상의 의결로, 또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는 방안), 국회차원에서의 대형 비리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나 국정조사위원장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의 도입, 인사청문회의 점진적 확대실시, 법안결 때 복수의 교섭단체가 참여토록 하는 방안, 국회음부즈맨 제도 등을 검토해 왔다. 국회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연중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매달 1일 국회가 자동개회하는 '상시국회'체제의 확립, 법안 심의기간의 연장(최소 3일에서 1개월로), 복수상임위제도, 예산위원회의 상설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따서 법안이름을 정하는 법안 실명제, 모든 표결에서 의원의 이름과 찬반여부를 기록하는 표결실명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검토·논의해 왔다.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선거구제를 조정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국민회의는 논의만 무성했을 뿐, 그 어느 것도 법제화되거나 실천에 옮겨진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야당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왔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가하면, 긴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회기말에 가서야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졸속의 변칙처리를 강행했다.

정당과 선거제도의 개혁: 김대중 정부는 정당이나 선거제도의 민주화나 슬림화(slim)를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제시하였다. 전자의 예로서, 공직자 후보공천권의 지구당으로의 이전, 주요 당직의 경선제 도입,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 조항 개정,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화 등이 있다. 정치비용 특히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유입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법인세의 1% 정치자금화, 지구당의 유급당직자 인원감축, 당비-보조금 연계제도인 매칭펀드시스템의 도입, 정당이 설립한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가지원방안,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시 정당비용을 선거비용에 합산해 총액을 제한하는 '선거비용 총액제한제' 등이 있다. 정당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구당을 연락사무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주민들의 탈(脫)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포기해 버렸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정책대안들 중에서 지금까지 법제화되거나 실천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물론, 지난 6·4지방선거 직전에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후보예정자 그리고 지구당위원장의 주례금지와 위반시 벌칙부과, 관혼상제 축·부 의금 제한, 명함·현수막 금지, 공직사퇴시한의 90일에서 60일로의 단축 등 정치비용축소와 정치부패척결을 위한 법제화도 이루어지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조치도 일부 취해졌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부패방지과 정치비용축소는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최종법안이 변질되어 버렸으며, 후자의 경우 민주주의의 심화를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한 노조지도부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나아가 후보기탁금 반환요건을 강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기존 정당과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지방정치인에게는 불리하고 정치민주화에도 역행하는 조치도 취하기도 했다. 정당이나 선거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비용의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기는커녕 이미 김영삼정권하에서 개정된 선거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를 입증하는 단적인 예는 바로 7·21재·보궐선거라고 할 수 있다. 7·21재·보선때 7개 선거구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운동건수는 46건으로 1개 선거구당 약 7건으로, 이보다 앞서 있었던 4·3재·보선 때 4개 선거구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운동건수 8건, 1개 선거구당 2건에 비해 3배 이상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선관위 관계자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돈을 쓰는 선거양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돈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때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단언하기조차 했다. 지난 3.30 재보선에서는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신종 관공개입 선거와 20~30억원을 뿌리는 '돈선거'를 자행했으며, 얼마전 계양·강화 등지의 재보선에서도 비슷한 액수의 돈이 뿌려졌다고 한다.

정당민주화: 김대중과 국민회의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사례를 보고자 한다. 김대중과 국민회의는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공직자후보의 공천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민주화하겠다고 단단히 약속하였으며, 지방선거 무렵에도 그렇게 한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지구당에서 공천한 후보를 당선가능성이 희박하다거나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천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중앙에서, 그것도 당총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당내민주화는 다른 정당의 간섭이나 압력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라는 단기적 이해관계에서 반개혁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지방자치제 개혁: 지방자치의 심화를 위한 조치를 보기로 하자.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는 집권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기회와 권리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중앙정부가 담당해 왔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지방경찰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조례발의제·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견제·감시기능을 지역수준에서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심화를 위한 개혁조치도 역시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그나마 이루어진 것은 정치비용의 축소라는 명분으로 지방의원수를 대폭 축소하고 선거운동방식을 국회의원선거에 준하도록 바꾼 것인데, 전자는 정리하고 등으로 일반국민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고통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대신 지방정치인을 제물로 삼은 사례이고, 후자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불참하는 사례만을 늘려 놓았을 뿐이다.

참여와 인권의 정치를 위한 개혁: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참여의 정치', '인권의 정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국민 앞에서 선언했다. 그리하여 전자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방금 살펴본 정당의 민주화와 주민자치의 확대를 위한 조치와 약속함과 동시에, 노사정의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국민과의 대화'를 두 차례 실시하였다. 후자를 위해서 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기부의 정치개입과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국가정책을 설득하거나 호호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노사정위원회 역시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설사 경제주체들이 정부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는커녕 노동부에게조차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순수한 협의기구에 불과했다. 게다가 노사정위에서 경제주체들과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사항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재벌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조차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 결과 김대중정부는 참여와 합의의 정치체도로 정착시킬 수도 있는 '홀륭한'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업구조조정에 적지 않은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 안기부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고 인권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각종 국제인권상의 단골 수상자이며, 그런 대통령답게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올해 안으로 국민인권위원회도 만들고 인권법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정치범에 대한 전향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오는 8·15사면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안기부는 야당측이 주장하는 호남편중인사, 국가예산의 호남편중 지원 공세 등에 대한 반박논리와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와 정

부 각 부처 그리고 국민회의에 전달함으로써 정치개입의 의혹을 샀다. 안기부의 정치개입의혹과 더불어 김대중 정부는 인권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스스로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시국관련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민주화실에도 불구하고, 시국관련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민주화실에도 불구하고, 시국관련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민주화실에도 불구하고, 시국관련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정치인의 부정부패척결: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는 물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정치인들의 비리나 부패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각종 비리의혹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여권 정치인들이 대량으로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성그룹 특혜대출사건은 물론, 야당의원들이 개입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청구, 기아, 개인휴대통신(PCS), 종금사, 컴퓨터게임사업중앙회 로비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사가 된 경우에도 축소하거나 처벌을 미루어 왔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몰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외환위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김대중 정부하에서조차 비리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일은 김대중 정부가 한편으로는 비리정치인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앞장서서 정치부패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성그룹 특혜대출사건도 그렇고 98년 7·21재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경유착이나 비리(금권선거)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돈안들고 깨끗한 정치와 선거를 구현하겠다고면서 지난해 3월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놓고서는 올해 3월 30일에 있었던 재보선에서 여야없이, 특히 여당이 앞장서서 흑색선전과 금권선거를 자행하였다. 국세청을 동원하여 정치자금 모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상목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4월 7일에 열린 국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이제는 부정부패척결은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

지역감정해소: 김영삼 전대통령은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으나 영남주민과 정치인들은 누구도 말리지 않고 있다. 지역감정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전문성과 능력을 위주로 했다는 정부고위직인사는 출범초부터 지역편중과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도가 지나쳐 전문성과 능력은 아예 고려하지 않은 듯한 인사들

하고 있다. 얼마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인사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는 '나는 바다를 사랑하고 생선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한다.

정부기구개편 및 인사: 정부구조조정과 인사 그리고 정부운영방식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김대중정부가 46억원이나 되는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 만든 정부조직개편안(3월 27일 확정)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각각 1명씩 늘리는 등 오히려 기구를 늘림으로써 정부출범 초에 단행했던 정부조직개편 이전상태로 돌려 놓았다. 정부운영방식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해양수산부는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채 일본과의 어업협상에 임함으로써,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모두 불리한 협상결과를 얻어 어민들의 '생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문화관광부는 한자권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교육부나 건교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한자비용을 밀어붙였는가하면, 보건복지부는 사전준비와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여론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를 강행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지 행정부처간의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부처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서 생기기도 했지만, 국민회의와 정부부처간의 사전협의를 없었거나 국민회의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데서 생기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의약분업을 올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가, 의약계 이익집단의 로비에 밀려 1주일만에 입장을 바꿔 실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7일에는 육군과 공군 장성들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북한이 최근 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있으면 좋다는 등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는 발언을 놓고, 청와대비서실과 외교통상부간의 이견이 노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식수전용댐 건설계획, 그린벨트해제방안, 택시제도 개선방안, 경제청문회 증인목록 유출, 인권위원회 설치문제, 제2건국위의 성격과 구성방식 등을 둘러싼 당정간, 정부부처간 갈등과 혼선 또는 DJP공동정권의 무능력과 개혁부진을 보여주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4) 외교분야

앞에서 이미 우리 경제의 대미 자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가 요구한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높은 대외의존도로 말미암아 얼마되지 않았던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대외자율성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즉, 98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는 김대중정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욱 용이하게 외세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미 김영삼정권때 UR협상과 그에 따른 WTO참여, 그리고 OECD가입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은 크게 제한받기 시작했으나, 외세의 '합법적인' 직접 개입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IMF와의 협상을 통해 IMF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함

으로써 외세가 직접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IMF 또는 OECD 등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정책들은 주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띤 것으로, 국공영기업의 민영화와 외국인 인수허용, 상품시장은 물론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외국인투자자의 경영권확보가 가능하도록), 재벌개혁(투명성확보가 핵심요구사항임), 노동시장의 유연성강화(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환경규제완화, 외국인의 토지소유 및 기업설립·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등 각종 규제의 완화(철폐) 등과 같은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정부기구 및 인원축소나 정치인 축소, 또는 부패방지법제정(OECD) 등과 같은 정치·행정과 관련된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외세가 우리 정치나 경제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거나 변화를 강제하지도 않고 또한 할 수도 없다. 우리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정책영역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이후 우리의 정치와 경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외세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된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한국을 둘러싼 선진자본주의국가간의 경쟁을 염두에 두었던 탓인지, 상대적으로 일본에 가까운 김종필총리(와 자민련)는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려고 했다. 작년말 경 일본을 방문한 김총리는 큐슈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일본식 자본주의가 기반을 두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미국자본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자본의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IMF구제금융을 받는 협상과정에서 이미 일본상품(예, 자동차와 문화)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한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후반기에는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문화시장개방조치를 내린바 있다.

물론,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개되는 자본주의모델과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경쟁에서 김대중정권은 주로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종속이 더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대중정권(특히, 김대통령, 임종렬 경기도지사, 유종근 전북지사 등)의 친미성향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주로 미국자본의 상품 시장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식 자본주의(정책)가 이식되고 있다.

대미종속성이 강화된 김대중정권은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데 있어서 '충대'를 매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고 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데 힘입어 미국은 비슷한 성격의 개혁을 아시아지역에도 강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일본과 (엔블럭에 들어가 있는) ASEAN국가들의 강한 반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작년 아셈(ASEM)정상회담에서 미국부통령 알 고어(Albert Gore)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민주화요구가 아세안국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한국을 앞세워 아시아지역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자

이제 미국의
반로보아미의
반로

본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미국식 모델이 아시아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을 모델케이스(Model case)로 설정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세안국가들의 반미감정을 우회하기 위해서 한국을 앞세우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다고 본다. 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미국은 미국식 정치·경제제도를 아시아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 김대중대통령으로 하여금 '아시아적 가치'를 비판하는 대신 미국식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도록 하거나, 미국의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가 한국의 세종연구소와 협력(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세종연구소내에 <민주주의포럼>(Forum for Democracy)을 설치하고 여기서 아시아지역의 젊은 정치지도자들을 불러와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선전·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어쨌든, 김대중정권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김대중정권은 자신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력은 다른 조치들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선, 미국은 2001년까지 주한미8군 병력을 매년 3백~5백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약 1천6백명 늘리는 등 미8군 전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주한미군은 1998년에 이미 5백명을 증강하였고, 99년에 5백명, 2000년에 3백명, 2001년에 3백명을 늘릴 계획이다. 이들 병력은 그동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미8군 사령부의 작전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작전분야에 집중배치될 것이라고 한다. 다음,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이 정규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전면전 발발 징후가 포착된 뒤 발령되는 대북경제태세인 테프콘-3 이상 상태에서만 작전에 참여해온 주한미군이 앞으로는 평시 대간첩작전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도 미군을 무기한 주둔시키기로 했으며, 김대중정권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김대중정권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쉽게 때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이러한 대미종속적 외교정책은 유럽연합이나 동남아국가 등 '제3세계'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예, '미제앞잡이')가 악화되거나 한국을 가법계 여기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예를 한가지만 들어보자. 벨기에정부는 자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다이옥신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이미 3월 중순에 알고서 실험을 거친 뒤 4월 26일에 최종확인을 하였다. 5월 3일에 인접국인 프랑스와 네델란드에만 이 사실을 비공식 통보했으며, 1개월 이상 숨기다가 5월 28일에야 유럽연합에 알렸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지금까지도 벨기에정부로부터 아무런 공식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 사실을 안 것은 유럽연합에 통보한지 3일이 지나

서, 그것도 의신을 통해서였다. 이 사건은 한국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지만, 동시에 외국의 한국에 대한 무시와 멸시를 입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5) 남북관계

김대중정권을 이전 정권과 가장 확실하게 구분짓게 하는 트레이드마크(trade mark)는 금강산관광으로 표상되는 대북햇볕정책(Sunshine Policy, 또는 포괄적인 포용정책 Engagement Policy)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인 포용정책은 남북간의 화해·협력, 북한의 대외개방 환경조성, 군비통제, 정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 전환,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개선 및 정상화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지만, 이전 정권과 구별짓게 하는 점은 정경분리의 원칙과 흡수통일론의 포기공식화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의 차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포괄적인 포용정책은 북한이 무력도발 의사와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과,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계속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물론 김대중정권도 통일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김대중정권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바람보다는 햇볕이 낫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햇볕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흡수통일론의 변형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김대중정권은 햇볕정책이라는 표현 대신에 포괄적인 포용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둘의 정책적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이 이와 같은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의 대북정책과 흐름을 같이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수구세력의 저항과 비판으로 대립과 대화의 양극단을 오락가락했던 김영삼정권과는 달리 김대중정권은 대북정책만큼은 확고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정권의 가장 큰 장점이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지는 김대중정권의 의지나 선택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일어난 서해상의 남북한 합정 대치사태는 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6) 김대중정권에 대한 총평

외환위기와, IMF와 미국 등 외세의 압력이라는 긴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김대중정권은 노동자들로부터 외국자본이 요구한 '개혁'조치들은 김대중대통령이 취임

도 하기전에 법제화되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한 '개혁'(즉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 재벌체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상호지급보증 단계적 금지, 결합채무제표 도입, 소액주주권리 강화, 사외이사제도 등), 공기업 민영화, 관치금융 등 국가의 시장개입을 방지하는 방향으로의 정부기구개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자본(특히 금융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투자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이 그것이다. 김대중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 '참여민주주의'와 '깨끗한 저비용의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것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몇 가지 사소한 사항의 개정 이외에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중앙정치인(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다른 공직(예, 국회의원직이나 대통령직)출마를 금지시켰는가하면(최근에 위헌판결을 받았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수를 20%가량 축소하여 저비용의 정치를 위한 개혁의 부담을 지방정치인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된 정치개혁이라고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재벌개혁, 실업대책과 국민연금제도 등의 사회복지정책, (특히 대미)외교정책, 인권정책이나 교육정책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정권이 지난 1년 6개월간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정책과제는 IMF와의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정책과제는 이에 종속시켰던 것 같다. 즉, 김대중정권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기업의 투명성·상호지급보증의 금지·건전한 재무구조·핵심기업의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벌개혁, 외국인투자가와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탈규제와 민영화,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IMF와의 협약을 이행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여타 정책분야는 IMF와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개혁도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 정부기구나 인원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돈 안들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개혁도 결국은 자본에 대한 정치자금수요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실업대책,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복지들도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실업과 불안정고용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거나 그 비용을 사회화(보다 정확하게는 중산층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IMF, 미국 등 외세도 한국이 IMF와의, 협약, 즉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이행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 깨끗하고 돈안드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이나,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기구개편 및 인원축소,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일자리창출과 같은 실질적인 실업

대책,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이나 교육정책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따라서 김정권이 소홀히 하더라도 재촉하거나 실시하라고 압력을 가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런 김정권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하고, 때로는 포상하기도 했다.

3. 전망과 과제

김대중정권은 재벌개혁과 노사정위의 실패로 노동자와 화이트칼라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올상반기에는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민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깨끗하고 돈 안드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데 실패함으로써 중산층으로부터도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한일어업 협상실패, 의약분업 연기, 부처만 늘려놓은 정부기구개편, ('바다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오명을 갖게 만드는 등의) 부적절한 인사정책, (중국계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느닷없이 실시한) 한자병용 등 잇따른 정책혼선과 실책은 김대중정권의 정책력과 외교력의 한계를 더욱 부각시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망을 잃었다. 또한 내각제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한 JP의 '몽니'와 그 연장선상에 벌어진 한나라당 이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는 JP와 자민련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의 한계와 개혁성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연합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이처럼 김대중정권이 올 1/4분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정치적, 정책적 리더십을 상실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김대중대통령의 개혁의지 내지 도덕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남아 있었고, 따라서 주요 과제는 정치력과 정책능력을 회복·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집권당과 내각을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피'로 '수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젊은 피'의 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김대중정권의 개혁성과 도덕성을 결정적으로 의심케 하는 사건의 터지고 말았다.

지난 3월 30일 3개 수도권지역에서 있었던 재보선에서 국민회의가 앞장 서서 금권선거와 신종 '관권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김대중정권은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 5월 24일 단행된 개각에서 작년 대전지검 '항명'파동으로 도덕성을 의심 받은 김태정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고 그의 부인이 '옷너물사건'에 연루된 것이 분명해지자 국민들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은 여론몰이로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는 등 '케번'을 늘어놓았고, 급기야는 진검사의 '검찰 파업유도'발언이 터져나오면서 김대중정권

의 그나마 조금 남은 도덕적 리더십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⁵⁾

이제, 김대중정권이 개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적나라한 정치권력과 마키아벨리적인 권모술수 밖에 남지 않았다. 즉, 편파적 표적수사로 야당의 저항과 비판을 약화시키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악을 통해 노동자와 민중의 독자정당은 물론 시민세력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지역감정을 은밀하게 확산시키고, 16대 총선에서는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5) 김태정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김태정씨는 바른 법조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바른 법조인'의 자세를 가졌다는 근거로 97년 대선 직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사건' 수사 유보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선거자금 사건을 수사한 일이었다. 이 두 가지 행동이 '바른' 법조인으로서 취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여론의 온갖 질책에도 불구하고 김태정씨를 해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김대통령은 '검찰 수사결과 김장관 부인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 어떻게 해임하느냐... 나도 민심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나는 같이 일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여론몰이로 희생당한다면 장관들이 국가나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 "판테" 눈치를 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대응방식은 적어도 네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검찰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더구나, 원래 5월 31일에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이틀 늦춘데다가, 6월 2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바로 전날인 6월 1일 김대통령은 '잘못이 없는데도 마녀사냥식으로 몰려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정치검찰에게는 지시로 받아들여졌을 것)을 발표했다. 둘째, 옷너물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여론에 따르지 않겠다는 주장해 놓고서, '조폐공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김태정 법무장관과 발설자인 진형구 대검공안부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셋째, (아마도 김대통령은 옷너물사건을 야당·보수언론·재벌·관료집단 등 개혁저항세력이 '불순한' 뜻을 가지고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김대통령이 '여론몰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선거도 일종의 여론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선거결과에는 승복하면서 옷너물사건과 관련된 여론에는 왜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가하는 점이다. 다음, 국민들은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화뇌동에 잘 휩쓸린다. 그러니, 여론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여론보다는 '항상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신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좋게 말하면 엘리트주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만한'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김대통령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정부의 공식발표나 입장을 믿지 않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개혁저항세력이 '조작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들이 현정권으로부터 신뢰를 거둬 들인 징후로 받아들여야 보다 겸손한 '국민의 정부'다운 행동이 아닐까. '폭탄주'마시고 검찰의 노조파업유도'진상'을 폭로한 진검사 사건으로 김대통령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지고 말았다. 조폐공사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러지 않았느냐하는 의심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제부터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야당은 물론 국민회의조차도 김대통령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진영(노동자와 민중 그리고 진보적 시민)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없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즉, 김대중정권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안적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⁶⁾ 대안의 정치세력없는 상태에서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비판은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무력감을 확산시키거나 지역주의 등 연고주의의 포로에 남게 만들 뿐이다.

대안의 정치세력은 노동자와 농민 빈민 그리고 화이트칼라층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를 얻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진보정당건설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나 기존 정당이 일반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들 정치 조직이나 정치인들이 선거때만 지지를 호소하는데다가 당선 이후에는 자신이 한

6) 일각에서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이나 진보정당건설은 보수언론, 재벌, 관료집단 등 수구기득권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 개혁의 여지를 더욱 줄이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네 가지다.

첫째, 김대중정권은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가정을 받아들여도 되는가? 하나의 답은 정책분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일게다. 예를 들면, 대북햇볕정책(또는 포용정책)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답은 김정권이 추구하는 개혁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특히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최우선 순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에서 추구하는 개혁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일게다.

김대중정권의 개혁이 민주적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김대중정권이 5공세력 등 수구반동세력과 화해하거나 연대하려는 것은 개혁을 위한 것이지만, 민주적 시민·사회세력이 (우연히 개혁저항세력과 맞물려) 김대중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개혁저항세력의 입지를 강화할 뿐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거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둘째, 김대중정권이 조그마한 헛점이라고 보이면 개혁저항세력이 치고들어올 것이라는 점은 자신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할 때 이 점을 감안하여 매사 조심하고 가능한 한 완벽하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적이 더 많지 않았는가? 셋째,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조금은 맹목적으로) 비판한 적도 없지 않았으나 건설적으로 비판하거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더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나 제안에 대해서 김정권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아예 외면하거나 오히려 구박한 적이 더 많지 않았는가? 넷째, 김대중정권이 진정으로 민주적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면 수구세력이나 개혁저항세력과의 타협이나 협조를 '구결'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의 조직기반을 강화해주고 이들과 연대하거나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공약을 잊어버리거나 아예 공약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등 '당신들의 천국'을 지키는데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의 정치세력을 건설하려는 이들은 평상시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활동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대중조직이나 시민단체 가운데 일상적인 활동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단체나 지역에서는 정당건설과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셔널센터가 정치방침을 분명히 해서 소속조직들에게 전달, 교육하고, '여건이 되는' 지역이나 단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I. 글머리에

- 김대중정권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탄생하였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내외요인의 결합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내외자본의 과다차입을 통한 국내적 과잉생산과 세계적 과잉생산(특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과잉생산)은 대기업 부도와 경상수지 적자 누적, 그리고 외채누적을 초래하였고, 활동이 자유로운 초국적 금융자본은 위협을 느끼자 한국을 훌쩍 떠나버렸다. 외환위기 형태로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 한편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온 IMF는 ① 경상수지 적자 개선과 외자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금리-긴축정책을 강요하고, ② 국내 상품시장과 자본/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관철시키고, ③ 부실금융기관의 폐쇄,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재벌 개혁' 등 구조조정정책(구조조정을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고금리-긴축 정책, 자유화/개방화 정책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김대중정권은 이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구조조정 사례는 80년대의 남미에서 그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가속화된 국제적인 금융적 흐름의 대규모적인 확장파와 탈규제는 1980년대 초 제3세계의 전반적인 외채위기를 초래하였다. 1982년 멕시코의 모라토리엄(외채상환 유예조치)으로 가시화된 발전도상국들의 외채위기는 IMF와 IBRD(세계은행)의 제3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개입을 야기하였다. IMF와 IBRD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발전도상국에게 국가예산 삭감, 금융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 공공부문 민영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개방, 정부규제의 합리화 및 축소, 소유권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적 구조조정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합의)'로 불리는 이러한 정책들은 워싱턴에 모여있는 IMF, IBRD, 기타 국제금융기관들, 미국내의 정책 포럼들의 성원들로 구성된 정책 엘리트 집단이 제안한 일련의 '개혁' 정책들에서 기원한다. 정책적 요점은 경제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전환과 시장관계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 정책의 목적은 국내 경제를 안정화하고,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외채를 상환하는 데에 필요한 외환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IMF, IBRD는 해당국 화폐의 평가절하, 무역 및 외환 자유화, 관세 인하, 가격과 임금의 탈규제, 공기업의 민영화,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의 삭감, 식량과 기초적인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던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처방의 결과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단기적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성장 저하, 투자와 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 구조조정은 근본적으로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를 재편하였다. 그것은 착취율의 증대 그리고 생산비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지위약화를 초래하였지만 자본가에게는 더 낮은 비용으로 축적과정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이와 같은 교과서적인 처방은 한국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IMF위기를 1년 6개월 안에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다만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아시아지역 및 한국에서의 이례적인 과잉생산과 결부되면서 통상적인 시기 또는 여타 국가에서보다 훨씬 과격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정권의 노동정책은 '경제위기 극복(?)'의 부속물일 뿐이다. 아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으며, 노동정책은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 평가해 보기로 하자. 우선 구조조정정책의 결과부터 살펴보자.

II. 구조조정의 결과

1. 경제상황

-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99년도 1/4분기의 성장률은 4.6%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는 일단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되살아난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연간 4%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98년 2/4분기에서 3/4분기의 성장률이 -7%대의 최악

의 성장률을 보인 것을 감안하고 현재의 회복추세가 지속된다면 99년 전체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예측한 것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대체로 5% 이상으로 전망을 수정해 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고금리-긴축정책을 통한 98년의 -5.8% 성장률은 피할 수 있었던, 과도하게 낮은 성장률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제현황, 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 1998년 7월 참조). 제조업생산도 1/4분기에 12.7%가 증가하고 있고 가동률도 4-5%포인트가 늘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증시도 활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 않다.

첫째, 성장률의 측면에서 한국은행에서 예측한 정도의 성장이 현실화하더라도 한국경제의 이제까지의 성장률 7%내외와는 차이가 있고, 더구나 -5.8%라는 낮은 성장을 보인 작년을 기준으로 한 성장이어서 총경제규모는 여전히 97년 수준에 못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도 좁은 의미의 구조조정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금리인하나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의 효과 때문이다.

둘째, 제조업의 성장에서 반도체의 성장과 여타부문의 성장 사이의 차이가 크다. 반도체는 98년에 이어 99년에도 30-40%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12.7%에 이른 1/4분기 제조업성장률이 반도체부문을 제외하면 6.7%에 불과하다.

셋째, 현재의 성장은 자산계층 소비증가에 의해서 추동되는 바가 크다.

넷째, 저금리도 썩 건강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금리하락 원인은 경상수지 증대와 외국자본 유치 등을 통해 확보된 달러가 원화로 교환되면서 화폐증발효과를 낳고, 이렇게 증발된 화폐가 적절한 수요자(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이다. 현재의 저금리는 여전히 과잉시설 상태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이다.

다섯째, 주식시장의 활황도 저금리의 다른 표현이다. 늘어난 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주식, 부동산 등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에 몰려들고 있어서 생긴 현상이다. 한편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주체는 외국자본과 기관투자자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약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에 의해 일정하게 지탱이 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향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 미국경제는 과잉투자자 노릇을 하는 이윤율하락 ⇒ 증시 붕락 ⇒ 소비 및 투자의 감소와 자본 유출, 그리고 대체투자/투기적 발생 및 자본 유출 ⇒ 증시 붕락 ⇒ 소비 및 투자의 감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즉, 세계적으로 과잉생산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고(현재의 세계경제 위기는 70년대 이후 과잉생산에서 비롯한 구조불황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크게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상호간에 실업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에 깊숙히 편입되어 있는 한국자본주의가 세계자본주의로 더욱더 깊숙히 편입해 들어가는 상황에서(IMF 구조조정협약으로 인한 자유화/개방화,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 시도 등을 보라) 미국자본주의의 불황으로의 진입은 현재의 미약한 경기회복을 다시 위협에 빠뜨릴 것으로 보인다.

- 결론적으로 현재 경제가 약간 살아나고 있는 이유는 주로 반도체 수출증대와 주로는 자산계층의 소비증대 때문이며, 노동자 민중들이 건전한 소비에 기초하지 않은 성장이다. 또한 미국경제의 불황으로의 진입으로 이 회복기조는 언제든 지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초국적 (금융)자본 지배력 증대

- 초국적 (금융)자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IMF를 내세워 자신들의 잘못된 투자결정에 대해서는 피해를 전혀 보지 않고 외채원금 및 이자를 원활히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국적 자본들은 한국의 은행, 공기업, 핵심 민간기업들을 인수해 가고 있다.

- 초국적 금융자본은 상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대출금들을 IMF 개입 이후 원활히 상환받게 되었다. 단기채의 일부를 장기채화하면서 한국정부의 보증도 받았고 이자율도 약간 높여 받고 있다. 대마불사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이다. 외채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사용될 달러는 IMF로부터 끈 구제금융과, IMF가 강제한 고금리-긴축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신규로 유입된 약간의 외자를 통해서 마련되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내수(투자와 소비)의 대폭적인 감소와 이에 따른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이라는 고통을 대가로 하는 것이었다.

- 여기서 현재의 외채상황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의 외채는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96년말 1,643.4억불, 97년말 1,580.6억불, 98년말 1,514.6억불이었고, 99년 2월말 현재 1,454.3로 집계되고 있다(<표 1> 참조). 99년 2월말 현재 96년말에 비하여 190억불 정도 줄어든 상태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추계하고 있는 외채(총대외지불부담)에는 기업부문의 외국은행으로부터의 현지금융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을 더할 경우 1997년 12월말 현재 총외채 부담 규모는 1,86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삼성연구소). 즉 기업부문의 외국은행으로부터의 현지금융이 290억불정도 되는데 이를 합하면 99년 2월 말 현재 총외채 부담 규

모든 여전히 1,740억불 정도에 이른다. 즉 외채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런 외채규모라면 이자지불무담만도 연간 100억불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외채이자와 원금상환이라는 명분하에 앞으로도 국가와 자본은 계속하여 노동자 민중의 제권리를 억압하려 들 것이다.

<표 1> 외채 동향

	(억불)			
	'97말	98말r	99.1말p	2말p
공공부문	222.6	365.0	353.8	340.6
국내금융기관	700.4	578.9	572.5	568.6
외은지점	195.6	139.8	132.3	131.5
민간부문	462.0	409.8	411.7	413.6
총대외지불부담	1,580.6	1,493.5	1,470.3	1,454.3

자료: 재정경제부

-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내 기업의 인수 합병도 심각하다. 우선 금융기관의 경우 "토종은행이 사라진다"는 말대로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을 투여하여 정상화시킨 서울, 제일은행(뉴브리지스사와의 협상이 채 끝나지는 않은 상태)이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갔고 외환, 한미, 신한 등 대부분의 은행이 외국자본과의 합작은행화하고 있고, 국민, 주택은행 등의 경우 외국인 지분비율이 40-50%에 이르고 있다.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구조조정-외자유치라는 미명하에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정상화시킨 다음에 초국적 (금융)자본에 넘어가고 있다. 둘째, 일반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인수합병도 활발하다. 삼성전자, 포철의 외국인 지분비율이 40-50%에 이르고 있고, 맥주업체, 광고업체, 유통업체가 초국적 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고, 한화그룹, 한라그룹 등 내노라하는 그룹사의 최우량 기업들이 초국적 자본의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 본격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배인삼공사 등 최우량 공기업에도 외국자본은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포철, 한전, 한국통신은 올해 해외 DR발행을 끝마쳤다. 이런 결과 '99. 2월말 현재 총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시가기준으로 19.48%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상장사 총 720여개 중 외국지분이 15% 이상 되는 회사는 1백개로 1년 사이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IMF체제에 들어간 지난 해부터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 '기업사냥'에 나선 외국자본은 올 1/4분기까지 600여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100%의 지분을 싼 값에 매수, 아예 기업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도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외국인보유 주식비율

(단위: 만주, 억원, %)

구 분	직접투자 비율*	주식투자 비율	합계 비율
주 식 수	34,070 (2.85)	97,963 (8.21)	132,033 (11.06)
시 가	29,595 (2.21)	231,687 (17.27)	261,282 (19.48)

* 총상장주식수(시가) 대비 외국인보유주식수(시가) 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3. 5대재벌 비대화

- 김대중 정권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재벌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 55개 퇴출사업장의 발표로 시작된 기업구조조정은 8개 업종 사업구조조정, 6대 재벌 이 기업들의 워크아웃, 5대재벌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 그런데 8개 업종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신규자금 지원, 우대금리적용, 상환유예, 출자전환 등 다양한 형태의 특혜성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대 재벌 '개혁'은 2000년까지 부채비율 200% 축소를 목표로 주채권은행들과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거해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열사 및 자산 매각, 증자나 외자유치를 추진중인데 받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채권단은 계열사 중 1개사에 출자전환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으며, 5대재벌은 출자전환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형태의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일반에게 세부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들 5대 재벌은 공기업 매각 과정에 참여하여 거대 공기업들을 새롭게 인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부채비율 축소라는 유사개혁마저도 이루어질 지 의문이다(보도에 의하면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한다).

- 이런 결과 현재까지는 5대 재벌은 더욱 더 비대화하고 있다. 자산총액으로 보면 98년말 현재 5대 그룹 자산총액은 310조9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7조8천억원(13.8%) 증가하였다(6대 이하 그룹은 161조9천억원으로 0.2% 감소). 이에 따라 30대 그룹 자산총액 가운데 5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가 높아졌다. 5대재벌의 사업확장도 그야말로 경이롭다. 예를 들어 현대재벌의 경우 올들어 증권시장의 자금을 싹쓸이하면서 금융, 백화점, 자동차, 반도체 사업부문 등에서 사업확장을 계속해나가고 있고, 군수부문, 발전설비분야에서도 사업확장 기회를 노리고 있다. LG는 데이콤 장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인수하려 하고 있다.

- 재벌총수 및 그 일가 지분비율 비중 증가를 보면 98년11월25일21일 현재 5대 그룹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포함)들은 이들 그룹의 전체 상장주식의 33.1%를 보유해 97년말(26.9%)보다 6.3%포인트가 높아졌다. 에스케이 최대주주는 97년말 30%에서 지난 21일 현재 40.6%로 10.6%포인트가 높아져 지분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현대는 42.66%로 9.6%포인트, 엘지는 34.02%로 4.8%포인트, 대우는 28.20%로 4.62%포인트, 삼성은 20.05%로 1.9%포인트 증가했다.

4. 공적자금 투입과 일반국민의 조세부담

-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채권 발행액이 '97-'99년 3년 동안 64조원(국회에서 의결된 것)에 이른다. 이중 40조6천억원의 채권이 '97-'98년 2년간에 발행되었고 나머지 23조4천억원의 채권은 '99년에 발행된다. 98년말까지 부실채권 정리로 19조6천억(장부가액으로 약 44조원에 해당), 증자자금으로 6조3천억, 퇴출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및 순부채보전금으로 14조7천억원이 채권이 발행되었다.

-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5개 인수은행에 대해 인수후 부실화된 자산과 관련한 손실보전을 위해 2조2,562억원(올해 세차레로 예정된 출연계획중 제1차분에 해당)을 추가로 출연하였고, 증자와 관련해서도 조흥은행에 2조1123억원 증자가 있었고, 3조5천억 이상(증자자금 1조5천억과 부실채권 정리자금 2조원 이상)의 자금이 이미 투입된 제일은행에 5조5천억(증자자금 4조원과 부실채권 정리자금 1조5천억)의 신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고 서울보증보험에도 1조2천500억원의 출자를 할 예정이다.

- 그런데 64조원의 채권발행도 부실채권규모가 정부가 애초에 추정한 118조원 규모일 경우에서의 액수이고, 부실채권규모를 한국은행이 추정한 규모, 즉 총대출의 30%인 171조원정도로 잡는다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금지원 규모는 필요자금의 2/3 정도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고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현재 금감위 위원장은 이로 인하여 위에서 이야기한 금융구조조정 자금으로 잡힌 64조원 이외에 10조원 정도가 추가될 것이라고 했고 세계은행은 금융구조조정 자금으로 64조원 이외에 5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투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이런 채권발행을 통한 공적자금 투여에서 발생할 원금손실과 채권이자 등은 고스란히 일반국민의 몫이다. 우선 64조원 채권에 대한 이자는 재정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그리고 부실채권정리에서 부실채권매각을 통해 이 비용을 환수한다지만 채권이자와 부실채권거래(매입, 매각)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또한 부실은행의 증자를 위해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기에서는 출자금 환수를 통해 이를 환수할 계획이지만 국민은 또한 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경우에서 보듯이 증자한 자본금이 잠식될 경우 이 자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손해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예금대지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에 대해서 채권이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지급금도 재정부담이 된다. 결국 이만큼 일반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5. 대량해고와 노동조건 악화

- 그러면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우선 대규모해고 및 실업이 문제이다.

- 5개 퇴출은행에서 고용승계가 된 노동자는 전체 8,950명(비정규직 포함시 10,260명)중 32% 수준인 2,800여명 정도이고, 7개 조건부 승인 은행에서는 32% 정도의 인원이 감축되었다. 공기업에서의 98년 인원감축 규모는 16,532명으로서 정부의 감축 계획 13,669명을 초과하여(120.9%) 진행되었고, 99년의 경우 3월말 현재 8,442명이 감축되어 계획 대비 57%정도가 진행된 상태이다. 99년 3월까지의 총 인원감축규모는 24,974명으로 2000년까지의 계획(41,257명) 대비 60.5%가 진행되었다. 정부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의 경우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16,470명(98년 초 정원의 26.1%)의 정원감축계획이 잡혀있는데 이 중 98년에 9,947명이 감축되었고, 올해는 4,156명 감축 계획 중 4월말 현재 12.2%인 509명이 감축되었다. 서울지하철과 지방공사의료원이 적용을 받게 되는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계획에서는 기획예산위 지침과 거의 유사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평균 30% 정도의 인원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 이런 결과 4월 현재 정부통계에 의한 실업자수가 155만이 넘었고 실업률은 7.2%에 이르고 있다. 이는 40만이 넘는 공공근로 참여자를 취업자로 계산하여 얻은 수치이고 실망실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민주노총이 집계한 실질 실업자수는 400만에 육박하고 있다.

- 이런 실업상황은 그나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동강도 강화, 임금삭감이 다반사이고, 일부 업종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노동시간이 증대되고 있으며, 능력주의 인사제도(차등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통한 관리통제 강화 및 개별임금화로 노조가 무력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 공공부문에서 4.5% 임금삭감 및 복리후생비 축소를 전제하는 예산편성지침 및

퇴직금제도 개악안과, 개별임금화를 통한 노조무력화를 낳을 연봉제 지침이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에 내려진 상태이고, 대부분의 출연(연)이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 및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57개 출연(연)중 51개 기관이 내년부터 연봉제를 확대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모든 출연(연)이 성과급과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25개 기관에서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에만 적용하던 계약제를 전 연구원 및 행정직원에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

- 정규직은 해고되어 비정규직(시간제, 계약제)으로 대체되면서(대표적으로 은행권에서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인력이 부족하자 이들을 일부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상용근로자'('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와 일용 및 임시근로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근로한 자'따라서 정규직이라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이 포함된다)의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미만으로 떨어졌다. 실업률이 2월과 3월에 비하여 약간 하락한 4월에도 상용근로자수는 더욱 줄어들었다(<표 3> 참조).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전년동월대비)

(단위 : 천명, %)

	'98.4	'99.3 (증감)	'99.4 (증감)
임금근로자	12,232	12,139 -112 (-0.9)	12,350 118 (1.0)
· 상용	6,561	5,995 -650 (-9.8)	5,952 -609 (-9.3)
· 임시	4,027	4,037 6 (0.1)	4,117 90 (2.2)
· 일용	1,643	2,107 532 (33.8)	2,282 639 (38.9)

주: ()내는 증감률

자료: 노동부

- 비정규직의 문제를 인턴사원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 "우린 인스턴트?" 라는 자조섞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부가 고학력 실업대책의 하나로 지난 1월부터 4만여명 규모로 실시중인 인턴사원제는 저임금 노동력 착취의 대명사로 되고 있다. 허드렛일, 야근 특근 등 장시간 노동, 저임금(60만원)이 인턴사원제를 특징짓고 있다. 정식 사원도 아니고, 나아가 정식사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인턴은 약자일 수밖에 없어 이처럼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 '병어리 귀머거리 6개월', '파리목숨'이란 낱말까지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인턴사원제만이 문제만은 아니고 비정규직 일반의 문제라는 것이다. 재계약이 되지 않을 우려 때문에 기아임금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이런 비정규직은 계

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인들 안전할 수 있겠는가!

6. 부익부 빈익빈

-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됨을 의미한다)가 지난해 0.3157로 잠정 집계돼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85년(0.3116)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지니계수는 중산층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낮아져 90~97년까지 0.28~0.30 수준을 유지했다.

- 지표는 또 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이 전년 대비 평균 8.2% 줄었으나 소득 최상위 20% 계층은 1.2% 감소한 반면 최하위 20% 계층은 19.3%나 감소해 부의 편재현상이 심화됐다.

- 중산층붕괴현상도 심각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4월 13일 발표한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전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국민 3명 중 1명이 지금은 하류층으로 전락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79.2%가 3년 이내에 다시 중산층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겨레신문 1999/4/13)

- 신문자료를 통해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초래한 사회상을 알아보기로 하자.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지 1년. 가장 크게 달라진 사회상은 중산층의 붕괴와 노숙자의 급증, 가정의 파괴,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 등이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휴·폐업으로 100만명이 넘는 신규실업자가 쏟아져 나왔고 이들을 상당수는 노숙자와 부랑자로 전락했다. 실직자 가운데는 절도나 강도짓을 해서라도 생활고를 면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 운영해온 주유소가 부도를 당하자 지난 4월 서울로 올라온 이 모(50)씨는 올해 여름부터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는 노숙자 신세가 됐다. 주유소는 채권자의 손에 넘어갔고 전업주부이던 아내 박 모씨(47)는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 있다.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파출부와 식당종업원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씨처럼 가정을 뺏겨치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전국의 노숙자는 지난해 1000여명에서 올해 3900여명으로 늘었다. 불과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 이 가운데는 여성도 상당수에 달하며 심지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노숙자가 등장해 충격을 줬다. 남편의 실직이나 무능력, 생활고를 이유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중인 부부도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

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협의이혼건수는 지난해 같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사회복지시설과 아동보호소, 장애인시설은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생활보호소 등도 이런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다. 실적이 나 사업체 부도로 가장이 가출하고 가족구성원은 뿔뿔이 흩어지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을 지칭하는 'IMF 이산가족'이란 단어가 지난 여름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지금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노부모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은 사람들도 실질소득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표현했던 많은 봉급생활자들이 지금은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에서 밀려났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20.4%에 달해 중산층 붕괴를 설명해줬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소득조사'에 따르면 하위 80%계층의 소득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5~14%가량 줄었으나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2.3%가량 늘었다."(매일경제 신문 1998/11/18)

- 한편 한동안 잠잠하던 자산계층의 과소비 행태가 되살아나고 있다. 1/4분기 김포세관을 통한 사치품 수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스키용품과 골프용품이 각각 8.7배, 5.6배 늘어난 것을 비롯해 음향기기 5.5배, 비디오기기 2배, 장신구 2.1배, 진주·다이아몬드·루비 등 보석류 1.9배, 향수 및 화장품류 1.5배 등 사치품이 크게 늘어났다."(한겨레 신문 1999/4/14)

- 그야말로 한국사회는 독점과 불평등 심화, 빈익빈부익부로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III. 김대중정권 노동정책의 기본방향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은 이상의 신자유주의 정책, 그 중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김대중식 구조조정에 수반하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임금삭감 및 경쟁적 임금체제 도입을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의 모양을 갖추어 관철시키거나, 합의의 틀에 편입되지 않는 노동운동에 대해 물리적 탄압으로 강제하려는 것이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이다.

이러한 노동정책은 전체적으로 '신노사문화 창출'로 표현되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구체화되었다. 그 하나는 노동시장정책, 노사관계정책의 맥락에서 구성되었던 이른바 3자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이다. 다른 하나는 '노사분규를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즉 공안적 차원의 문제로 놓고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이다.

1. 노사정위원회

1) 일방적 고통전담 기구

1기 노사정위원회의 잠정합의 이후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임금삭감, 사내복지 후퇴, 부당노동행위 등 총체적인 공세에 직면했고, 그 결과 생활고, 가족공동체 해체, 자살 등 고통을 전담하였다. 반면 자본 특히 재벌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부은 구조조정 자금에 힘입어 과잉투자과 부실경영으로 초래된 부담을 손쉽게 벗어버리고, 독점을 강화했다.

총자본(국가-자본)이 압도하는 계급역관계와 노사정의 한 축인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를 주요한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중립성이란 애초에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2) 노동자들에 대한 '분할지배전략' 도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노동계 구도하에서 김대중정권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자 분할지배전략을 구사했다. 노동시장유연화의 피해가 훨씬 큰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 대중의 투쟁의지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왜곡함으로써 투쟁전선의 확대를 가로 막아 온 것이 사실이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김대중정권의 분할지배전략은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끊임 없이 시도되었다. 지도부와 현장조합원의 체계적 분리, 투쟁력있는 조직과 상대적으로 투쟁력이 약한 조직에 대한 분할, 업종·부문별 분할이 기도되었다. 김대중정권의 이런 분할전략은 구조조정의 시기조정과 함께 하나의 목표를 공격할 때 분할 대상인 다른 부분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협의진행 및 추상적인 약속 남발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이 사실이다.

2. 공안적·폭력적 노조탄압

1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법제화라는 목적을 달성한 이후 김대중정권에게는 투쟁봉쇄기구, 이데올로기 홍보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유용성이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나 1기 노사정위원회 이후 조합원대중의 강한 반발로 인해 노사정위원회만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때문에 김대중정권 노동정책의 다른 한 축에는 투쟁에 대한 폭력적 탄압정책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즉, 김대중정권은 1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를 법제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것을 국정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1) 합법파업을 원천봉쇄한 채, '합법보장 불법필벌'

이러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은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99년도 중요과제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탄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즉,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관행 확립을 설정하고 있다. 합법보장이라고 하지만, 김대중정권 하에서 고용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길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정권 차원에서 정부정책으로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문제인 정리해고, 임금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별연맹이나 총연맹 차원에서 정부정책의 수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개별기업주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투쟁만이 합법적인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연맹과 총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노동정책적 요구투쟁은 어떤 경우에도 합법투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위노조의 개별기업주에 대한 투쟁에 대해서도 정리해고중단 요구는 법질서에 따라 구제받을 문제이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IMF체제하에서 김대중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필수공익 사업장들은 직권중재조항에 의한 합법파업의 길이 봉쇄되는 등 이중삼중의 차단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개악한 것은 이런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노동자적인 정책 하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은 촉발될 수밖에 없고, 기업주를 상대로 하는 투쟁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의 성격상 노동자들은 거리로 진출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여기에 합법적인 파업투쟁이 봉쇄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가두시위에 더욱 힘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정권은 집회장소축소, 경찰의 해산명령권 부여, 질서유지선 이탈시 구속처벌 등의 악법조항을 신설하여 노동자들의 가두집회·시위를 질서유지선 내로 가둔 것이다. 차도행진보장에 의한 시위효과는 노동자와 시민 간의 대립을 조장하여 상쇄하려 하고 있다. 결국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정리해고 관철이라는 최고의 정책목표에 모든 기본권은 종속되고 있다. 정권의 '개혁성'과 민주성을 송두리채 부정하는 헌법상 집회·시위권 개악을 단행한 것이다.

2) 구조조정·정리해고 강행을 위한 노조탄압공작

'합법보장 불법필벌'은 김대중정권이 새롭게 제시한 것은 아니다. 역대 독재정권이 대체로 그런 논리 하에서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노동자들 역시 98년 이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파업'을 감행했다. 98년 하반기는 5대재벌 빅딜, 공공부문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이에 대한 주요

기간산업 조직노동자들의 저항이 예견되는 시점이었다. '합법보장 불법필벌'만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꺾는 것이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 김대중정권은 대검찰청 공안부를 앞세워 구조조정 강행을 위한 노조탄압공작을 자행한 것이다.

98년도 중앙행정기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의하면 법무부의 첫 번째 주요사업을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로 설정하고 있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실업사태에 편승한 불순세력의 사회혼란책동 방지 등 민주적 질서 파괴활동을 철저히 봉쇄한다는 것이다. 즉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차원(공안적 차원)에서 철저히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공안대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었다.

김대중정권의 공안적 탄압과 개입은 '노사분규의 예방'에 머무르지 않는다. 김대중정권의 공안적 탄압과 개입은 노동운동의 약화가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99년 법무부 국정사업에 따르면 노동계의 산별교섭체제 보장 요구가 '노동운동진영이 실업자 조합원 자격 범제화를 통한 산별노조 주도권장악'으로 규정하고 산별교섭체제 문제점 적극 홍보, 노동사무소 등을 통한 행정지도로 기업별 협상 유도, 교섭권 위임을 차단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국정보고에 대해 대선 공약으로 업종별, 산업별 교섭 유도를 내건 바 있는 김대중대통령은 아무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추진했다.

이런 배경하에서 대검찰청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을 전개했고, 조폐공사노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모범(?)을 만들어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탄압하려 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이 노조탄압공작으로 노조무력화와 구조조정·정리해고 강행을 기도한 것은 조폐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교통공단, 만도기계, 한국중공업, 서울지하철, 지방공사의료원 등 98년 투쟁과정에서 공안대책협의회가 개입한 노조탄압사례가 적지 않다.

[부산교통공단]

- '98년 3월 12일 시민중재단, 노조, 공단 3자의 사회적합의로 부산대 경영 경제연구소의 용역결과대로 따르기로 하는 합의서 체결
- '98년 5월 21일 건교부가 공단 재개정안에 대해 반려 조치함.
반려이유 : 기획예산위의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과 연계되지 못한다.
- '98년 7월 3일 노사합의이행을 촉구하면서 노조 파업
- 7월 3일 04시 : 공권력 투입
- 의문 : 첫차 운행시간이 05시 20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자진해산 할 수 있는 퇴로까지 차단하는 형태로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조합원이 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려 불가피하게 선로에 갖히게 되고 결국 파업으로 유도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서 진술한 바가 있다.

- 파업참가자 500여명 전원 연행, 해고 32명, 중징계 41명, 481명에 대해 100만원에서 50만원 벌금, 조합비 가압류
- 1998.6.30 기획예산위원회 공기업 구조조정계획 발표, 민주노총 7월총력투쟁 전후 시점에서 자행된 공작적 탄압

[만도기계]

- 당시 만도기계노조의 파업은 조정절차등을 거친 적법한 파업으로 파업참여 조합원들은 출퇴근하며 식당, 주차장등에 모여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의 평화적 파업을 벌이고 있었으며 일체의 생산시설 점거, 폭력등의 행위가 없이 노,사교섭을 진행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6천의 대규모 경찰력 투입
- 만도기계는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노,사교섭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1999. 6. 9일 교섭에서도 재확인).
- 당시 노조측의 상당한 양보안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임금반납은 반납이고 반드시 정리해고도 해야 한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배경이 공권력 투입을 전제로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 공권력 투입, 2,600여명 연행, 46명 구속, 300여명 입건과 노조의 조업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달간 민간사업장내에 사업주의 요청없이 경찰력이 상주
- 공권력 투입전인 8월말 각 대검주재의 각 경찰창장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 개최의 의혹이 있다.
-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는다"는 고용합의서 체결 이후 만도기계노사는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고용유지 방안을 협의중이었으며, 학자금등 복지부분의 축소, 생산감소에 따른 휴무실시등의 성과를 낳았으며 연월차 휴가를 이용한 노동시간 단축등에 대한 구체방안을 협의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98년 7월말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은 조폐공사의 예와 유사하다.

[한국중공업]

- 한국중공업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반발해 3월25일 2시간 파업, 4월28일 4시간 파업, 5월12일 전면파업을 벌였는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김창근 위원장등 노조간부 5인을 고소

-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된 노조간부들은 이미 자진출두해 조사를 마쳐 별 일 없이 돌아왔고, 회사와도 8일부터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어 김창근 위원장도 7일 경찰서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는데 돌연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사건이 보도된 8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회사쪽 김종채 관리본부장과 정석균 총괄부장이 참석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불구속 처리를 요청한다. 그동안 업무방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중단되었고, 6월8일부터 노사가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업차질을 빚을 위원장 구속은 원치 않는다"는 요지로 불구속 처리를 공식 요청하였다.
- 당일 12시경 모처에서 창원지역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김진태 공안검사가 강력히 위원장 구속 의지를 표명했다는 설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운동이 활발하던 창원지역에서도 공안대책협의회가 주요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깊숙히 개입해왔고, 진형구 부장이 중앙 공대협 의장이듯 사실상 공안검사를 이를 주도해왔다.
- 검찰이 한국중공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와 마창지역 시민연대등 지역사회의 반대투쟁을 사전에 무력화하여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무리하게 위원장을 구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강하게 일고 있다.

3. 실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

김대중정권은 노동시장유연화정책에 의한 대규모 실업을 전제하고, 그에 대한 사후적 대책을 나열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실업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1998년 2월,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노동정책의 방향으로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는 사회'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김대중정권 100대 과제 중에 (31)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내실화, (32)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3)근로자 복지강화와 산재·고용보험제도 정비, (34)노사정 동반자관계의 구축과 생산적 노동문화의 정착 등 네 가지를 열거했다.

이중 고용유연화(정리해고, 비정규직화)와 임금유연화(임금삭감, 경쟁적 임금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유연화가 핵심이다. 고용유연화(정리해고, 비정규직화)로 20%의 노동자를 잘라내면서 한편으로는 실업정책을 제시하는 이율배반적인 노동정책으로 인해 김대중정권의 실업정책은 애초에 그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다. 임금삭감(기본급삭감, 수당삭감, 단협상 복지조항 파기)과 경쟁적 임금체제도입을 구조조정의 전제(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외자유치조건 개선)로 설정하

Handwritten notes:
 2월 25일 2시간 파업, 4월 28일 4시간 파업, 5월 12일 전면파업
 43 -

는 노동정책 하에서 근로자 복지강화는 애초에 화려한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사회복지정책은 어떤가? 김대중정권은 의보통합, 국민연금 확대 실시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본원칙을 방기했다. 이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고, 세계개혁을 방기한 김대중정권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김대중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일원화 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발전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IV. 결론

그동안 민주노총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때에 노동자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구조조정·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하여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정권의 공작이 폭로되었다. 노동자들은 전민중과 연대하여 일체의 불법적 구조조정, 공작적 노조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공안적 노동정책 전면중단,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탄압으로 인한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징계철회, 손배소송철회, 정리해고자 원직복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투쟁의 고삐를 죄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단축 등 민주노총 4대요구 쟁취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 하
사회복지정책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반 동안의 농정에 대한 진단과 처방

최진국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1.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농민들은 김대중 후보의 각종 농정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전통적인 여당표 중 약 40여만표를 더 모아 김후보를 지지하여 정권교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바 있다.

-식량자급기반 확충과 직접지불제도의 조기도입 및 확대 실시, 협동조합을 개혁하여 농민의 조합으로 돌려줌, 농축산물의 유통구조개혁과 농산물가격 안정, 김영삼 정권의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부채의 해결, 농어촌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전국민 통합일원화, 농어촌 교육, 영육아 보육, 여성농민 정책의 전향적 집행 등 농업, 농민, 농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들에 대해 대선 전, 당선 직후, 취임 초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대 농민 공약을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취임 후 1년이 지나고 다시 한해의 절반을 보내는 지금 그 술한 공약은 빌 '空(공)'자 헛 약속이 되어 농민들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 IMF사태이후 비료, 농약, 사료, 유류, 농자재 값 폭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에 비해 경제난 속에서 극심한 소비위축과 결과적인 가격하락이 만성화되고 있고, 특히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연대보증 채무책임까지 겹쳐 생존권의 위기가 심화된 것은 물론 다시 농사지을 여력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최악의 농업공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이행은 전 농민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 농업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폐기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것은 농업, 농민 포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

농민 위한
농업 정책

협동조합의 비약 → 20세기 2
협동조합의 비약

2. 협동조합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 자신의 농업관과 농정개혁이 담긴 '대중경제론'과 대선 공약에서 농어민의 자주, 자율조직인 협동조합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고 사회적 기능만을 담당하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분리하여 각 협동조합의 전국연합체 체제로 개편하며 생산, 구매, 판매 사업 중심의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주장과 공약은 온데 간데 없이 농림부의 '사이비 개혁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오히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협동조합을 정부정책 대행기관 또는 공사화하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 심지어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전농과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에 대한 온갖 음해를 시도하고 관변언론, 관제 조직을 동원해 여론을 오도하는 등 관권, 금권 탄압을 일삼고 있다.

3. 말을 바꾸고 각종 농정공약을 개악하고 있다.

- 협동조합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농정현안에 대해서도 약속을 뒤집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 농진공, 농조연, 농조 등 일명 '3농통합'을 추진할 당시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수세폐지를 약속했으나 내년 1월 통합된 '농업기반공사' 설립을 앞둔 지금 수세를 계속 거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서 부당수세징수위사를 흘리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해 있다. 김대중 정부는 기초산업인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농촌 공동체의 구심이며 이농예방의 중요한 근거인 농어촌 학교를 통폐합 한다거나 노인이 많은 농어촌의 유일한 근린 공공의료시설인 보건 진료소를 급속하게 해

체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농어촌에 대해 상상을 초월한 파괴적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다.

4. '국민의 정부'는 '재벌의 정부!'이며 농민들에게 '배반의 정부!'

- 비료, 농약, 농자재 값이 환율 안정으로 대폭적인 가격인하 요인이 있으나 소폭인하 또는 중전 가격을 유지하여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 농민들에게는 여전히 고금리를 적용하고 연대보증에 대한 법적 조치를 무차별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농축산물가격 하락을 방조 또는 방치하는 등 가난한 농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은 가진 자만을 위한 것이며, 재벌의 이익과 정권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에 대한 반민중적 생존권 억압과 폭압적 공안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남북의 식량자급률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식량자급률 하락을 방관하고 대책없이 외국농축산물 수입 개방을 전면화하여 식량안보와 온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 우리 농민들은 김대중정권의 위선과 기만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의 생명산업인 민족농업을 사수하고 농민생존권은 물론 온 국민을 위한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부채해결과 협동조합개혁 투쟁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농민대중과 함께하는 전농민적 항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농은 모든 민중운동진영과 굳건히 연대하여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행과 사회개혁을 강제해 나갈 것이며, 만약 끝까지 국민과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재벌과 외세를 위한 반민중적, 반민족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강고한 연대공동투쟁으로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김대중 정권의 도시빈민 정책

양해등 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 들어가며

출범 1년 6개월을 맞는 김대중 정권의 도시빈민 정책은 한마디로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IMF 경제대책이라는 구실로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의한 실업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중산층의 몰락과 도시빈민의 증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도 정권은 재벌들에게는 온갖 특혜로 경쟁력을 키워주기에 여념이 없고 도시빈민에 대하여는 온갖 탄압으로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붕괴 하려하고 있다.

◆ 김대중 정권의 주택정책 - 탄압사례를 중심으로

1. 김대중 정권의 주택정책

김대중 정권은 2002년 까지 1가구 1주택의 실현, 토지공개념 보안을 통한 투기억제,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건립, 전담기관으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었다. 구체적으로 매년 50만호씩 총 250만호를 공급하여 전국 주택 보급율 110%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부분의 정부투자 확대, 임대주택 건설확대 및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임대주택의 직접공급,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에 따른 철거민용 임시주거지(가수용 단지) 확보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가구 다주택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주택 보급율 100%달성이라는 공약은 실효성이 없으며 실제 김대중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주택공사를 민영화, 임대주택 의무비율제 폐지, 주택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가진자들의 집 잔치로 뒤바뀌어 1가구 다 주택의 소유와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돌변하였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를 외치며 국공유지의 매각을 일삼고 있는 현 정권은 심각한 토지, 주택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21년 동계, 502만
주택 - 2년 내로 200만 이주
비밀취급은 주동원
양해등

2. 철거민 탄압 현황

김대중 정권의 철거민 탄압은 단순한 강제, 폭력철거를 넘어서 구속과 수배, 집회불허, 장기간의 원천봉쇄 등의 양상을 보이며, 또한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주거권 쟁취 투쟁이란, 당연히 구속과 수배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인식을 심어 넣어 철거조직 자체의 설립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기존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고도의 탄압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 같은 철거전략은 철거민들의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투쟁과 맞물려 현장 개발지역에서 한판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2-1. 군사작전과도 같은 김대중 정권의 최초의 살인, 폭력철거

98년 3월, 4월 용산구 도원동의 강제철거 사태는 사상초유의 철거 전쟁이었다.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연 4일 밤낮으로 삼성물산(주)에서는 외곽을 원천 봉쇄한 후 적준토건(현 다원)의 용역원을 고용하여 골리앗(철거민들의 공동숙소이자 최후의 농성 망루)을 향해 화학약품을 섞어 살상용으로 둔갑한 소방용 물대포를 쏘아대며 농성을 해체시키려 하였다. 3월 30일 고립된 주민에게 구급약품과 비상식량을 전달하려던 철거민 10여명이 적준 용역원에게 발각되어 백석호(29세), 이범휘(61세)씨가 2시간 동안의 살인적인 고문으로 전신 3도 화상과, 전신 골절의 몸이 되어 병원에서 발견되었다.

결국 4월 23일 물대포세례와 고공크레인을 통한 골리앗 침투, 침투용역의 쇠파이프 세례에 주민전원이 폭력 연행되며 일단락 되었다. (도원동 사태로 인해 총 11명이 구속, 100여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도원동에서는 약 한달 동안 연인원 3,000여명의 철거용역과, 10,000여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2-2. 유진상가 폭력철거

99년 2월 2일 새벽 6시 30분 안양시 유진상가에는 100여명의 철거용역과 800여명의 전투경찰이 투입되어 기습철거가 진행된다. 고가사다리 3대를 통해 건물 옥상으로 침투한 용역원들은 연막탄을 터뜨리고 저항하는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고, 청테이프를 입을 봉한 후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린후 전기드릴과 가스총을 들이대며 협박을 일삼고, 곤봉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갈비뼈가 골절되고, 잇몸이 함몰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3 99년' 살인, 폭력철거

6월 7일 새벽 3시 30분 수원시 권선 4지구로 향하는 수원여객 시내버스에 남

3/24

작하게 업드린 채 100여명의 전투경찰과 사복 형사들이 주민들의 눈을 속이고 몰래 주민들의 집단 거주지에 잠입하여 최루탄을 쏘며 잠자던 주민 5명을 강제 연행하여 이중 3명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주민 20여명에 대하여 검거령을 내렸다. 이 권선 4지구 지역은 5월 17일부터 한달째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98년부터 9명이 구속된바 있다. 또한 권선 4지구의 내용으로의 집회신고는 폭력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경찰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또한 5월 28일부터 진행되어오던 '철거민 백석호 동지 살인폭력 주범 삼성(대표 이건희)처단과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이 합법적으로 삼성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삼성측이 집회방해를 목적으로 고용한 용역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도 22명의 철거민이 무더기 연행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98년 6월 용산구청 앞에서의 도원동 철거민 집회가 구청 직원들에 의해 점거되고, 확장기, 플랜카드등을 빼앗기던 상황에 경찰이 이를 방조하던 것과 도원동 주민명의 어떤 집회도 허가하지 않던 상황보다도 한층 더 탄압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3. 개발사업의 본질

우리나라 주택개발의 문제점은 국가주도의 개발사업이 민영화되며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한다. 각종 개발사업 속에서 민간의 불만을 중간 단계에서 차단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방식은 재개발조합의 몇몇 간부와 건설업체, 관할 관청의 부를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전략해 버렸다. 98년 서울시 재개발과 6급 공무원인 이재오씨는 단순 서무담당 이면서도 20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98. 10. 15 동아일보)하였는가 하면 오성수 전 성남시장은 상가 개발업자에게 1억 6천 만원을 수취한 혐의로 구속되었고(98. 11. 21한겨레신문), 이밖에도 조합과 철거용역업체, 시공사, 관할구청등이 뇌물고리로 연결되 비리를 조장하고 재개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철거용역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400만-7000 만원을 받은 무악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등 12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철거용역업체인 적준용역의 정숙종 사장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3명이 수배되는등 21명이 입건되었고, 철거용역업체 적준용역과 지구환경은 3억 1700만원의 로비자금을 이들 8개 사업장에 뿌려 철거업무를 맡아 20-30%의중계료를 조합장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99. 6. 9 매일경제신문)

실제 그 비리가 정계와 제계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이들은 철거지역의

분쟁을 축소할 목적으로 철거용역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경비업과 강제퇴거, 이주업무를 중용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지구명 (구역)	철거업체	용역비 (철거동)	지구명 (구역)	철거업체	용역비 (철거동)
도원	적준(현 다원)	18억(추가 9억-780)	금호8	고려개발	26억(570)
하왕 1-2	인덕건설	4억(143)	제기2	태옥개발	9억(278)
봉천 2-2	적준	40억(1.034)	전농4	적준	14억(1.051)
남가좌 7	적준	11억(496)	행당2	적준	17억(534)
동소문	입산개발	9억(1.848)	봉천8	적준	25억(1.162)

<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자료근거 >

4. 김대중 정권의 본질

도원동 철거는 정권이 출범 한지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사태이며, 99년 6월 4일 방배동의 비닐 천막 강제철거가 있던 당일, 그 현장에 지어질 현대건설의 호화 아파트가 22: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반나절만에 분양이 끝난 것은 김대중 정부의 부유층과 극빈층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경품에도 아파트가 자리하는 모습과 강남의 100여평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아야 계약자들이 더 많이 몰릴 정도라는 것은 철거민들이 골리앗 위에서, 비닐천막 위에서 주거권을 요구하는, 그것도 김대중 정권의 공약사항인 철거민용임시 주거지(가수용 시설)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갖은 폭력과 구속 수배로 탄압하는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립되어 보여지는, 김대중 정권의 모습이 절대 가난한 자의 -그 들의 말대로 국민의-정부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모습이다.

5. 주택 문제의 대안

그간 도시환경의 미화라는 목적으로 도심지의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개발정책은 국가주도의 개발을 민간에 유치시키며 토지, 주택의 문제를 이윤 획득의 기회로 여겨 온갖 투기가 들끓고 있는 현실은 자본의 이윤 극대화라는 전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본이 이윤 획득을 위해 살인, 폭력을 서슴치 않고 있는 철거민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개발사업이 특정 개인의 이윤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략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된 현재의 주택개발을 공공이 직접 나서서 주도해야 하며 개발로 인한 피해가 지역 주민들에게로

미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주택, 토지의 문제가 투기의 개념이 아닌 노동력 재생산의 공간으로, 주거의 공간으로 재정립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무계획적인 개발계획의 무책임성에서 벗어나 순환식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 전 국토를 순환식으로 개발하여 특정지역의 인구 집중의 폐해를 막고, 철거지역의 문제점인 철거대책의 부재는 '선대책 후철거'라는 대명제에 입각하여 개발지역에서 늦게 진행되어도 되는 지역에 가수용 시설을 설립하여 설립후 재입주가 가능할 때 까지 철거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김대중 정권의 노점상 대책

IMF와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갈수록 실업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업자들이 자구책으로 노점상을 택하게 되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노점상 문제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역시 철거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혀 없다. 있다면 지난 9월 4일 '노점상 단속 심하게 말라'라는 대통령의 말을 공개한 것뿐이다.(9월 5일 각 일간지) 하지만 실제 노점단속은 폭력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임의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 전국 노점상 분포 및 실태

전국적으로 노점상이 어느정도 분포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노점상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 하다. 88년 상공회의소 유통통계자료를 살펴보면 980,599명으로 약 백 만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시의 98년 9월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시만 98년 9월 187,629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구분	수	비고/기타
가로노점상	34,500	89년 대비 50%증가, IMF이후 3,000여개 증가 서울시 공식 발표: 1만여개에서 1만 4천여개로
이면도로 주택가 노점상	25,000	각 구 자치단체 25×1가구 1,000(추정치)
재래시장 노점상	124,300	
공식형 노점상	3,829	가판대, 토큰판매대, 시민공원, 구두 수선소 등
합 계	187,629	

< 98년 9월 사단법인 대한국토계획학회 조사자료 >

1-1. IMF이후 노점상 증가의 실태

서울 : 1만여개에서 IMF 이후 1만 4천여개로 증가(한겨레신문)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별 통계상으로만도 최근 1년동안 30-100%까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공무원 역시 실제 노점상의 숫자는 발표보다 최소 2-3배는 많다고 고백한다.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이면도로, 재래시장 주변의 주택가 노점상, 지하철 보따리 노점상, 차량형 이동 노점상등을 합하면 실제 노점상은 100%이상 늘어난 실상이라 할 수 있다.

구분	10년이상	8-9년	6-7년	4-5년	1-3년	1년이내
비율 (%)	35	6	7	10	16	26

< 서울시 98. 11월 현재 >

구분	80년이전	81-85년	86-90년	91-95년	96년	97년	98년	합계
숫자	48	61	174	49	75	114	236	757
비율	6.3	8.1	23.0	6.5	9.9	15.0	31.2	100

< 광진구 건설관리과. 99. 1. 26 >

구분	기존노점	IMF후 신발생	합계	비고/기타
재래시장형	92	125	217	* 절대금지구역: 144개
보따리좌판형	24	7	31	* 잠정허용구역: 264개
손수레형	160	177	337	* 유도 구역: 234개
포장마차형	37	68	105	* 기타도로 및 지역: 115개
차량포장마차	19	48	67	* 도로상영업시설물: 105개
합계	332	425	757	* 이동형 제외

< 광진구 건설관리과. 99년 1월 26일 >

절대 금지구역 및 신규 노점상 억제정책으로 31곳의 노점상 유도 구역에 신규 노점상이 집중 유입되어 기존 노점상과 마찰을 발생하고 있으며 142개의 절대 금지구역의 대부분에 신규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다.

▷ 부산: 98년 10월말 7천1백여 개(97년 말 5천여 개에서 42% 증가, 부산일보 12/26)

불안함; 농구/상하/공공
 분산 물동

▷ 수도권 및 경기도 일원

- 성 남 : 98년 초 200여 개에서 98년말 800여 개로 증가 (매달 20, 30개가 꾸준히 증가)
- 안 산 : 상록수 / 안산 / 중앙역 등 10여 개 지역 500여 개 포장마차 성업 중 (한국일보 11 / 24)
- 수 원 : 1000여 개로 98년 상반기에만 200여 개 증가 (한국일보 11월 24일)
- 평촌신도시 : 범계역 중심으로 노점상 확대
- 군 포 : 97년 1백여 개, 98년 6월 현재 2백5십여 개 이동형(차량/지하철노점상 등)급증
- 충북, 청주시 : 노점상 증가로 1- 2.5톤의 소형 화물차와 밴 승합차의 수요증대로 이들 차종의 격상승,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거래물량 월20%증가, 승용차의 경우 57% 감소 한겨레신문 4월 4일)
- 경상남도: 98년 8월 현재 1만여 명(경남일보 98. 09)
- 울 산 : 울산교, 태화교, 일산지구 시내전역에서 증가 (500여 개 이상)
- 창 원 : 중앙동 체육공원 풍물시장의 포장마차 60여 대 외에 소계 / 반송 / 가음정 / 부영시장 / 지귀시장 / 대동상가 등에 800여개
- 마 산 : 500여개
- 진 주 : 간선도로변 노점상 97년 120여개에서 98년 9월현재 500여개 이상
- 김 해 : 대의동 신시가지에만 150여개, 인제대주변 주차장일대 포장마차 급증
- 거 제 : 고현매립지, 옥포대우주차장, 장승매립지 등에 150여개 신규, 1.5톤 소형트럭을 이용한 이동노점 급증

위의 자료를 토대로 예측컨데 IMF 구제금융실시 이후 최근의 늘어난 노점상수, 전국의 재래시장, 가게앞에 내놓은 좌판, 이동식 노점상 등을 감안하면 백만 노점상에 근접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2. 99년 현재 노점상의 생활실태

한정된 공간에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IMF이후의 소비심리 위축, 독점개발들의 유통시장 전면진출과 재래시장의 소멸 등으로 소득수준의 현저한 감소현상 뚜렷하다. 99년 1월의 광진구 조사에서 보여지듯 전세(41.3%)와 월세(35.7%)에 사는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IMF이후 50%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활수준의 하향화 현상이 나타나며 부부노점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IMF이후 월 평균 소득 85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이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소득-소비세 부담율은 97년 7.1%에서 98년 14.1%로 늘어남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 '경제위기 1년 조세정책 평가'보고서, 99.03.14) 노점상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

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 현 정권의 노점상 단속현황

김대중 정부들어 노점단속의 성격 전면적인 단속에서 개량화되고 지능적인 단속으로 위로는 몇가지 "노점완화 정책" 등을 선전하며 대시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단속을 실시하고 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늘어만 가는 노점단속 비율

작년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정부의 노점 대응 방침을 살펴보면 그 흐름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8년 3월초부터 관계기관과 서울시는 노점상 문제와 관련하여 절대금지구역 확대 계획을 구체화시킨 바 있으며 단속을 잘 하는 자치단체는 포상까지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다. 같은 달 노점상 집중 단속을 위하여 공무원과 공익근무 요원을 투입하여 강력 단속을 하겠다고 천명했다.7) 급기야 4월 9일 노점단속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근방에서 노점 단속중 총기위협으로 물의를 빚게 되었고.8) 9월 24일 중구 광장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장애인 노점상 전창욱 씨가 단속 과정에서 중화상을 입는 사건 등이 있었다. 서울 지하철 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97년 8월말까지 노점상 단속건수 3만 5,944건 월 평균 4,493건 작년 한 해의 단속건수인 1,611건에 비해 각각 178% 늘어났다. 월별로는 지난 1월 3,129건 에서 8월 5,29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밖에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98년 가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공익근무요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임이 드러났다.9) 또한 98년 연말까지 서울시는 포장마차 등 노점상 단속에 나설 것이며 지난 2/4분기중 노점상 1천2백62곳을 정비했다는 발표가 보도되었다.10)

2-2. 90년대 개량화된 노점단속 방법을 김대중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다시 활용

· 절대. 상대 금지구역 강화, 같은 지역에서의 선별적인 단속을 통해 노점상을 개별화시키고 있으며 스티카 발부 등을 통한 벌금과 구류의 강화 등 각종 법규

7) 중앙일보 3월 17일자

8) 한겨레 4월 9일자

9) 한겨레 11월 22일

10) 국민일보 9월4일

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상인 및 주민과의 마찰 유도를 통한 대 시민적 노점상 고립화 여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방법도 과거 용역단속반에서 최근에는 공익요원을 투입하는 단속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의 획일적이고 전국적이며 동시 다발적인 폭력적 단속에서 90년대 들어 바뀌기 시작한 개량화된 노점단속 방식을 김대중정부 역시 적용하고 있다

2-3 언론을 통한 긍정적 시행령의 한계

김대중 정부는 9월 4일 '노점상 단속 심하게 말라' 라는 내용으로 부산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시를 관계부처에 내렸다고 공개하였다.¹¹⁾ 이밖에 98년 초 정부는 언론을 통해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상인 즉 노점상, 행상까지도 매출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다음 신문기사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그 한계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노점상의 경우 허용과 단속기준을 등을 놓고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인권유린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자칫세가 오가는 기업형 노점상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집중단속하겠다는 방침이나 정착이들을 분리해낼 객관적 근거가 없다. ... 결국 노점상문제가 공무원과의 유착등 또다른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 문화일보 98년 9월 29일자 -

이와같이 현정부는 실업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의 일환으로, 그리고 이를 통한 대시민적 이데올로기의 우위성 확보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점상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노동부와 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의 이해의 조건이 상이하게 다르거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행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정부차원의 노점단속 완화 방침은 많은 부분 현실적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렇듯 대외적으로는 노점상 완화 방침등을 선전해대고 있지만 아직은 대국민 홍보용에 그치고 있다. 한편으로 지역 차원에서는 가로의 무단점거, 보건위생상의 문제부각, 도시미관 손상, 등의 지역 여론을 이용한 노점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방법등을

11) 9월 5일자 각일간지

[노점상들에게 심하게 대하지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4일 부산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이색적인 지시를 관계부처에 내렸다고 공개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3D업종에는 일자리가 남아둔다고 하더라」면서 「이러한 정신으로 지도해서 노점상이라도 하겠다는 자립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점상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6/11. 구로구청장 명함이다. 낙양라 {3}나-

사용하여 노점상 고립정책을 아래로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전노련을 중심으로한 내부(회원 및 단체)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들어 노점상연합 중앙에 대한 재정 상태 및 회원 동향에 대한 내사 등으로 연합회 활동을 압박을 하고 있으며 올해 '99년 들어서 1월 6일 성남 지역의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임신중인 차지영(여 24세)씨가 오른쪽 4개의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99년 정초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 대규모 집회 등을 개최하면서 전국노점상연합 의장단을 비롯 중앙집행부 5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시키는 등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속과 탄압의 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비단 이것은 서울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와는 형태만 달랐지 내용상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¹²⁾

3 현정부 대책의 문제점

3-1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없는 행정, 치안차원의 접근¹³⁾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IMF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가 생계형 노점상의 급증원인이고, 따라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저소득도시민들의 실업대책 수립과 사회안전망(복지정책) 구축, 생존권차원의 접근은 외면한 채 단속이라는 폭력에 의존한 신규노점 억제와 관리, 군사독재시절의 법질서, 거리질서, 환경미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12) 경기도 군포지역의 노점상이 1회에서 4회까지 과태료를 물은 바 있으며 경기도 당진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로 인해 일인당 수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 15일 1시 30분 경 안양 뉴코아 백화점 주변에서 장사를 하기위해 손수레를 끌고가던 10여 명의 노점상들에게 흩어져 있던 100여명의 공익요원, 구청직원, 전투경찰까지 합세하여 무차별적인 폭력과 만행을 저질러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 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7월 22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과일장사를 하던 노점상 배영자씨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구청의 계고장을 통해 7월 20일까지 자진 철거를 할것을 강요 받던 것으로 생계 문제로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 졌다.

13) 사회질서확립과 공공질서, 공중위생에 위반되지 않도록 단속은 지속 실시 (행정자치부 노점상관리대책 98. 09.17) 기본적 거리질서 유지관리, 시민생활의 편의도모(광진구건설관리과 99. 01.26) 법질서확립 및 시민불편해소, 시장상거래질서확립(수원시노점상특별계획. 99.03.05)

3-2 대책의 비현실성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제공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규,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에 대해 3-6개월 정도로 한시적이며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지역이 많다.

전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의 급증으로 전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 역시 직업훈련의 비효율성(훈련 기간중 생계, 재취업율의 문제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으며 이 밖에 용자알선 역시 액수의 비현실성(500만원 내외)과 보증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잠정허용구역 및 풍물시장 확대수용 역시 이미 포화상태로 기존노점과의 갈등만 유도하고 있는 상태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역시 가택보호자의 경우 1인당 7만 9천원이며 자활보호자는 학자금 및 의료보조 정도로 대단히 미약하다고 하겠다.

3-3 정부의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김영삼정권시절 160만명의 단속반을 투입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정부의 상황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단속을 하는 단위도 구청공무원(총무과/생활민원과/세무과/지적과/사회산업과/환경위생과/건설관리과등), 공익요원, 경찰공무원(전투경찰포함) 등을 동원, 순찰반 구성 및 운영 등 행정력에 쏟아 붓는 낭비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99년 상반기에 실시된 수원시 팔달구의 단속의 경우 노점상 38개소 정비를 위해 3일동안 공무원 372명, 공익요원 102명, 경찰공무원 180명 등 총 640명 투입하고 차량 45대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식대만 3백여만원인 투입되는 등 노점 단속에 들어가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는 심각한 수위를 크게 넘어가고 있다.

3-4 전담 부서의 부재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자치, 보건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간 혼선을 빚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도로 건설관리과, 식품위생과, 해당 경찰서 각각 단속주체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 구성되고 있는 자치구별 '노점상관리위원회'도 명분상 운영되고 있고, 구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노점상관리위원회 중 18명중 당연직으로 (구청3, 경찰2, 소방1 위촉직으로 구의원1, 교수2, 직능대표2, 다중이용시설 대표1, 상가대표3, 노점상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¹⁴⁾ 노점상관리위원회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노점상을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14) 광진구 노점상관리위원회 (99. 1.26)

3-5 법 적용의 임의성

노점상 단속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47조(도로에관한 금지규정) 5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도로법시행령 제29조 5항(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29조6항(적치물의 반환) 7항(미 적치물 등의 귀속),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주차단속법, 음반법 등 상가의 적치물, 백화점의 가판점, 도로시설물(가로판매점 / 구두박스 / 토큰박스등)에는 미적용 식품위생법의 경우 가로판매점 노점상은 미단속하며 노점상은 적용하고 있다.

4 노점상 문제의 대안

- ① 절대금지 구역, 상대금지 구역 철폐.
- ② 실정법에 의한 노점상 단속 중단.
- ③ 재래시장 노점상 탄압 중단.
- ④ 문화의 거리에 따른 노점상 탄압 중단.
- ⑤ 포장마차 집중 단속 중단.
- ⑥ 풍물시장 문제 해결.
- ⑦ 공익요원의 노점단속 중단.
- ⑧ 노점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해왔다.

4-1 노점상 합법화

노점상 합법화와 관련해서 노점상연합은 '88년부터 주장해 왔으며 이미' 92년에는 총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한차례 국회 입법청원까지 했던 경험이 있다. 노점상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구조의 문제이자(특히 IMF이후의 실업/고용 문제와 연결) 국가정책과 사회적 문제임으로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¹⁵⁾ 그러나 우리는 노점상에 대한 정책대안을 단체차원에 요구,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자치단체의 노점상 문제와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합법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점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 및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고 다양한 내부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그러나 진정한 합법화의 의미는 더 이상 생존의 문제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때만이 의미가 있겠다. 그러나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노점상이 노

15) 재벌해체, 정리해고중단, 노동시간단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적극적 고용창출을 꾀하고 이밖에 독점적 유통구조의 해체와 개선, 사회복지 확충등이 필요하다

16) 노점상의 이해와 조건을 이해시키며 법제화 투쟁을 매개로 기존의 노점단속 반대투쟁을 엄호하며 다양한 형태의 합법화 실현으로 노점상의 '삶의 질'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력을 확대/강화하고, 노점상의 정치적/사회적 권리의식 증진 및 구조적 모순타파를 위한 제반 노력으로 인식과 행동을 조직화하는 데까지 발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점을 하지 않고도 먹고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정부에게 추상적인 수준에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의 완화를 요구한다'는 정도의 견해가 아니다. 좀더 실질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고용불안정 해소와 늘어나는 노점상을 생산현장으로의 복귀를 꾀해야 할 것이다.

◆ 도시빈민 문제의 대안

국가주도의 개발을 민간에 넘기며 피해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국가가 개발을 주도해야 하며,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개발지역 주민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 주택의 개념을 투기의 개념이 아닌, 노동의 공간, 주거의 공간으로 정립해야 한다. 또한 무계획적인 개발정책은 순환식 계획개발을 시행함으로써 '선대책 후철거'를 전제할 수 있도록 하고 넓게는 전 국토를 순환적으로 개발하여 특정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피해들을 근절하는 것이며, 개발이 늦게 진행되어도 무방한 지역에 가수용 시설을 지어 지역 내에 건립 주택이 완공되어 철거민이 재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철거민들의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며, 노점상에 대한 합법화를 통하여 절대금지, 상대금지지역을 철폐하고, 단속을 중단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노점상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또한 노점상의 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 나가며

하지만 정권은 도시빈민의 요구나 도시빈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본질적으로 자본의 정권이며,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드러나듯이 정부는 자본의 강화를 위해서만 복무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독점자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빈민의 존재가 자본과 정권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 될 것이고, 본질적으로 자본에 입각한 김대중 정권은 도시빈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으며 또한 그럴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도시빈민 문제의 해결은 자본의 정권 그 자체를 폐기시키고, 노동자, 빈민의, 민중의 정권을 세우는 것이 필수 불가한 것이다.

때문에 비록 당위적이긴 하나 정권을 물러나도록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정권의 이름이 김대중이던 김영삼이던 마찬가지이며, 정권의 권좌가 그 본질인 자본

에 입각한 정권이라는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재생산되는 것이다. 그 본질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길은 자본의 파쇼적인 정권에서 정치권력을 노동자 민중의 정권으로 쟁취하는 길만이 강제철거가 없는, 노점단속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5월 24일 단행된 개각은 김대중 정부의 여성관련 공약이 공약(空約)이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건이다. 재임 중 여성장관 4명을 임명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첫 내각 구성부터 지켜지지 않더니 급기야 1명으로 축소되었다. 이어 임명된 차관 인사에는 여성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성 있는 여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장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것을 보면 능력 있는 여성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남녀공동의 참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등 공공분야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이 된 것이다.

여성계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남녀평등사회 구축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역대 정권 중에서 여성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성의 비정규직화 확대, 모성보호의 방치,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권한 약화 등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기대에 못미치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이지만 지난 1년 4개월 동안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과를 보면 먼저 지난 1월 통과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사회 전반의 남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은 고용 및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 용역·재화·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차별, 성희롱 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법률이다. 남녀차별 피해를 느낀 당사자가 남녀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여성특별위원회에 신청하면 조사(직권조사 가능)하고 차별사실이 드러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기대된다. 3차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내 성희롱 규제와 사업주 예방의무 조항과 간접차별 금지조항이 신설되어 여성 고용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성희롱 가해자를 부서이동 등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성과는 교육부,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에 여성

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해당부처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남녀차별적 법령의 제·개정을 위해 국적법과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99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차별의식 개선을 교육과제로 선정하였다. 노동부는 여성실업대책을 수립하여 실직여성가장 특별훈련과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을 도입하는 등 각 부처의 정책에 여성정책이 통합되어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 담당관은 기획관리실 소속이거나 여성특수부서로 되어 있고 직급이 4급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낮은 위상으로 인하여 각 부처에서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하에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여성고용기회 확대, 고용불안 해소,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여성인력 양성 등을 내세웠지만 IMF 1년을 경과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하였고 시간제, 임시직, 파견제 등 비정규노동이 여성노동자의 67.1%(313만4천명)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고용조정과정에서 새로운 남녀차별이 나타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우선해고'이다. 기혼여성(맞벌이 여성, 사내커플, 출산휴가 중 여성), 장기근속여성, 비정규직 여성을 1차적인 해고 대상으로 삼았고 정리해고후 비정규직(시간제, 계약직, 아르바이트)으로 유도하고 강제로 무급휴가를 유도하여 퇴직하게 만드는 등 성차별적인 여성해고가 빈번하였다. 노동부는 여성노동자의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차별해고신고창구>를 운영하면서 50대 그룹, 공기업, 30개 은행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두 번째 모성보호정책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량 실업국면에서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의료비 지출조차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모성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산전후 건강진단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지만 이에 대한 실사가 2001년 이후로 미루어져 있고, 산전후 휴가도 ILO가 권고하는 12주~14주에 못미치는 60일에 불과하다. 또한 출산수당을 사회보험에서 분담하겠다는 계획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표명되었지만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모성보호는 개별 가정의 일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낳고 기르는 사회적인 일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이에 대한 보호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99년 노동부 계획과 여성특별위원회 사업계획에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98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회의는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할당을 지키지 않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에서도 여성할당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내세울 여성후보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공천 장사에 혈안이 된 지구당 위원장들이 돈과 거리가 먼 여성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여성계에서는 중앙당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요구했지만 지구당이 결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 또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시 30% 여성할당을 명시하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여성들이 지역구부터 경쟁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여성이 경쟁을 통해 지역구부터 정치참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여성을 배제하는 장벽이 두꺼웠기 때문에 이 장벽을 제거하는 획지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없으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김대중 정부는 여성정책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말잔치로 끝난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게 되어 역사의 기록에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음의 10가지는 꼭 임기내에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 여성정책전담기구의 권한과 위상 강화(여성처 또는 여성·청소년부 신설),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에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여성인력육성과 육아지원제도 확대,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 방지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확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30% 여성할당,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및 승진목표제 도입, 기초출산수당제 도입 등 모성보호제도 확립, 여성관련 복지예산 증액, 성폭력·가정폭력을 다루는 공무원, 의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매매춘 근절방안 마련 등이다.

* 이 글은 노동정보은행에 실었던 글을 재인용했습니다.